
2008 정기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용 진 군 〉

인 천 광 역 시

처분요구사항 목록

일련 번호	제
----------	-------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3	○○도 해오름 축제 보조금 정산 소홀	관광문화과	주의			34
14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용자금 관련	개발계획과	주의			36
15	정정 입찰공고 부적정	재무과	주의			39
1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약내역서 작성 소홀	재무과	시정			41
17	○○ 호안도로 개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건설재난과 재무과	주의			43
18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소홀	재무과	시정	세입 11,092		45
19	채납 과태료 대납업무 소홀 및 과태료 채납처분 부적정	지역경제과	시정			48
20	미배정 정수물품 구입예산계상 등 물품관리 소홀	재무과	시정			51
21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자치행정과	주의			53
〈 국·공유재산분야 - 4건 〉						
22	국유재산 위임관리 민간위탁 전환 부적정	재무과	주의			56
23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부적정	재무과	주의			58
24	국유재산 대부관리 부적정	재무과	시정			60
25	국·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행정절차 소홀	재무과	주의			62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 사회복지분야 - 4건 〉						
26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 시설)운영 소홀	주민생활 지원과	개선			65
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의 상근 의무 소홀	주민생활 지원과	주의			68
28	기능보강사업(직원숙소 신축공사)추진 부적정	주민생활 지원과	주의			70
29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집행 부적정	주민생활 지원과	주의			72
〈 보건위생분야 - 3건 〉						
30	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보건소 (관련부서: 기획실, 재무과)	시정			75
31	병원선 관리·운영 부적정	보건소 (관련부서: 기획실, 재무과)	시정			79
32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보건소	시정			83
〈 청소환경분야 - 4건 〉						
33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제조설치 준공 처리 부적정	환경녹지과	주의		훈계2	87
34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홀	환경녹지과	시정			89
3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소홀	환경녹지과	시정			91
36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미 실시	건설재난과	시정			92
〈 보상교통분야 - 2건 〉						
37	보상업무 부적정	개발계획과 건설재난과 관광문화과	주의			95
38	자동차 관련 측사경 업무 부적정	지역경제과	시정			104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 지방세분야 - 4건 〉						
39	○○발전(◆◆화력) 주민세 등 과세 누락	재무과	시정	추징 105,407		107
40	지목변경 토지 취득세 등 과세 누락	재무과	시정	추징 59,780		111
41	○○발전(◆◆화력) 협력업체 주민세 등 과세 누락	재무과	시정	추징 29,444		113
42	가설건축물 등 취득세(농업존특별세 포함) 과세 누락	재무과	시정	추징 23,964		118
〈 관광건설행정분야 - 4건 〉						
43	건설업 등록처리 부적정	건설재난과	주의			123
44	법령위반 건설업체 통보 지연	재무과	주의			126
45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과	주의			128
46	피서철 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	재무과	시정	회수 30,218		131
〈 전산·통신분야 - 5건 〉						
47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미 수립	기획실	시정			136
48	군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소홀	기획실	주의			138
49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웅진군	시정		훈계4	140
50	인터넷쇼핑몰 웅진장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지역경제과	주의		훈계1	142
51	부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적정	보건소	주의		훈계2	144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 지적·토지관리분야 - 4건 〉						
52	도로 준공토지 토지이동 신청 소홀	건설재난과	시정			147
53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 부과	재무과	시정	추징 319,445		149
54	토지분할 등 처리결과 통지 소홀	재무과	시정			151
55	KLIS 편집·연속지적도 구축 시급	재무과 개발계획과	주의			153
〈 해양·수산분야 - 6건 〉						
56	어업면허 어장 관리 소홀	해양수산과	주의			157
57	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해양수산과	주의			160
58	범칙어선 행정처분 사항 미통보	해양수산과	시정			162
59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추진 부적정	해양수산과	주의			164
60	활어집하장 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해양수산과	시정	회수 762		166
61	어촌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소홀	해양수산과	주의			168
〈 토목·건설분야 - 9건 〉						
62	○○군도 6호선 도로건설 및 ◆◆리 도로포장공사 부적정	건설재난과	시정	감액 29,900		171
63	군도사업 추진 부적정	건설재난과	주의			173
64	농어촌도로사업 추진 부적정	건설재난과	주의			175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65	지방관리방조제(△△지구) 개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지역경제과	주의			177
66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개발계획과	주의			181
67	○○리운동장 정비공사 시행 부적정	개발계획과	주의		훈계1	183
68	○○포항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해양수산물과	시정	감액 2,469		184
69	○○리 어장진입도로 설계변경 부적정	해양수산물과	주의		훈계1	185
70	○○항 TTP 시설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부적정	해양수산물과	시정			186
〈 건축·영선분야 - 3건 〉						
71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행 부적정	개발계획과	주의		경정계2 훈계3	189
72	△△△△ 세트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문화과	시정			196
73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건설재난과	주의			199
〈 공원·녹지분야 - 8건 〉						
74	○○어촌체험장 조성사업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재무과	주의			202
75	대체산립자원 조성비 미 환급	환경녹지과	시정			204
76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미 반환	환경녹지과	시정			206
77	행정소송 비용 회수 업무 소홀	기획실	시정			208
78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공사 하자 검사 소홀	재무과	시정			210
79	○○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건설 기술자 배치·관리 소홀	환경녹지과	시정			212

일련 번호	제 목	소 관	조치구분			쪽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80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개발계획과	주의		훈계3	215
81	공무 국외여행 부적정	자치행정과	시정	회수 516	훈계4	217

인사·조직분야

[일련번호 : 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4,70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및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 현황 : 별첨
 - 기획감사실 손 ○○ 외 51명 : 18,220천 원
- 징계처분자 보수 부적정 지급 현황 : 별첨
 - 영흥면 박 ○○ 외 6명 : 6,480천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고 부양가족 기본요건은 부양 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가 심한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자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범위로 하고,

지급액은 배우자는 월 4만원 기타부양가족은 월 2만원 지급하고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변동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부양가족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항 규정에 따르면,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중 징계처분자는 정근수당을 미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6급 손○○이 모를 부양하지 않아 지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데도 2006. 9월부터 현재까지 400천원 상당의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하는 등 총 52명, 18,220천원 상당의 가족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영흥면사무소 농업6급 박○○이 2006. 4. 7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같은해 7월분 정근수당 1,002천원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급하는 등 총 7명의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6,480천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과다지급된 가족수당 18,220천 원, 정근수당 6,480천 원은 회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승진임용 대상자 명부조정 소홀 등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승진임용 제한사유 해제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수시조정 소홀

○ 현 황 : 개인정보 보호대상 비 공개

공무원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및 조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유가 해제된 일에 지체없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영흥면 행정6급 박○○외 4인의 감봉, 견책등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대상자에서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해제되었음에도 해제사유발생일에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가 정기(수시)평정일에 조정함으로써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85일까지 승진후보자명부를 지연하여 관리하였습니다

2. 무분별한 전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 현 황 : 개인정보 보호대상 비 공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기타 민원창구

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2008. 1. 1일 이후 3회의 인사에서 동일부서에서의 근무월수가 짧게는 4월, 길게는 11개월밖에 안되는 1년이내의 근무경력을 갖고 있는 개발계획과 김○○ 외 14명을 전보하였는바, 지방공무원임용령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보는 가능하나 잦은 보직관리로 공무원의 예측이 불가능하게 하는 인사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하였습니다.

3. 대우공무원 선발지연 등 업무추진 소홀

○ 대우공무원 선발현황

구 분	2006	2007				2008			비 고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시행일	10월 4일	1월 2일	4월 2일	7월 30일	10월25일	1월 2일	4월 1일	7월 1일	

대우공무원의 선발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규정 및 지방공무원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한 지방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운영에 의거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매분기 초월(1,4,7,10) 1일에 일괄 선발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대우공무원선발 및 발령을 짧게는 1일, 길게는 25일이 지나서야 대우공무원 선발 발령을 하여 인사발령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4. 승진임용시 교육훈련 점수 미달로 인한 승진심사 제외자 소홀

○ 교육점수 미달에 따른 심사제외자 현황

승진 심사일	5급→4급		행정6급→ 5급		세무7급→ 6급		행정8급→ 7급		행정9급→ 8급		기능직		비고
	대상자	제외자	대상자	제외자	대상자	제외자	대상자	제외자	대상자	제외자	대상자	제외자	
2008. 8. 6	4	2	16	4							17	3	
2008. 6.27									8	1	9	2	
2008. 3. 3	4	1	20	13	5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2항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의무 및 총괄 책무가 있고 동법시행령제4조5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반영조치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소속공무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공무원 교육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으로 본인이 부서장의 허락을 득한후 교육대상자 추천에 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차례의 문서등을 통하여 교육선발을 독려하였다고는 하지만 교육점수 미달로 인한 승진심사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공정한 심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징계처분자 관리 및 특별임용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불문경고자 징계 인사발령 현황 별첨 : 12명

○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 현황 별첨 : 5회 14명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칙 제10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규칙 시행지침 제8조에 의하면 징계처분권자가 인사위원회로부터 경고할 것을 권고 받았을때는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 소속 기관장 명의로 당해 공무원을 서면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하여야 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 기관장은 기능직 정원이 5인이상인 기관의 기능직 공무원 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인 10%이상으로 취업보호 대상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이때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의 채용 예정인원, 자격조건을 명시하여 추천의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2006. 2. 10 재무과 행정7급 서○○가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옹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상훈감경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기관장 명의의 서면경고 만을 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징계처분 발령하는 등 총12명의 불문경고자에 대한 징계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으며,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인 10%이상으로 취업보호 대상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이때에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의 채용 예정인원, 자격조건을 명시하여 추천의뢰 하여야 함에도 추천의뢰하지 않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자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기능직 공무원 특별임용 등 인사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엄정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획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공무원 정원 및 조직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농업직 공무원 정원 변동 현황
 - 2008. 1. 1 : 17명(복수직 포함)
 - 2008. 2. 20 : 8명
 - 2008. 8. 8 : 13명(복수직 포함)

- 병원선 정원 등 관리 현황

구 분	인력운영 현황	운영 예산	운항일수	비고
병원선(531호)	·총7명 ·해양수산5급 1명 ·기능6급(선박기관)1명 ·기능7급3명(통신,선박,선박기관) ·기능8급2명(선박, 선박기관)	·총계 : 796백만원 ·인건비:356 ·시설장비유지비:202 ·차량선박비:162 ·기타:76	107일 (2007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로 농업분야 기능이 기능이 쇠퇴하여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농업·행정직렬 구분없이 관리되고, 군 본청의 농업직 정원이 적어 인사교류의 어려움 등이 있어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다양한 업무를 소화할수 있는 행정직으로 정원을 2008. 2. 20 조정하였습니다(농업직 6급, 9명 ⇒ 행정직 6급, 9명)

위와같이 농업직렬 직위를 행정직렬 직위로 변경된 조직개편에 따라 2008. 5. 9 전직임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8. 5. 22 용진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 5. 23 행정직 6급 공무원 9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전직임용 시험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업직 6급 공무원 11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명이 합격하여 2008. 7. 1 전직 임용 하였습니다.

용진군에서는 전직 시험결과 총 9명을 선발 예정인원 중 4명만 선발하고 선발되지 않는 5명의 행정직렬 직위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원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2008. 8. 8 전직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무계획적으로 행정직렬 6급 5명을 다시 농업직렬 6급 직위로 변경하는 정원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1개의 직위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진군의 병원선 운영 인력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인력을 살펴보면 해양수산 사무관 1명, 선박기관 기능직 3명, 통신 기능직 2명, 선박 기능직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선박(병원선)의 경우 항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해양수산 5급 및 선박직 기능직 2명이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 해양수산사무관 직위가 필요치 않는데도 1989년 경기도에서 인수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선 운영상황을 확인한 결과 해양수산 사무관이 사무분장상 병원선 업무 총괄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역할은 선박 입출항시 선박 관리, 직원 교육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 선박수리 및 관리에 업무에서 단 2건의 문서에 협조하였을 뿐만아니라 선박수리 및 관리에 따른 설계 및 제반 품의 등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에 따른 문서관리를 보건소 보건행정팀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숙직을 매일 하고 있음에도 관련 일지를 2008. 1. 1부터 현재까지 동일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치 않고 인장날인하는 등 선박관리 또한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진군에서는 병원선 운영에 다른 해양수산사무관 직위의 책임성 및 난이도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자체조직진단을 실시한 사실이 전무하며, 2007년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용역보고서를 준공하는 등 정원 및 조직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자치단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정원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용진군(기획실,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해양수산물과, 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시정(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6

[제 목] 시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조치 부당(지연)

[현 황]

○ 2006년 시 정기 감사 처분요구 사항중 조치 부적정 사례 : 1건

- 처분번호 94 : 공사감독 소홀 및 옥상방수 설계 부적정

○ 2006년 시 정기 감사 처분요구 사항중 조치 지연 사례 : 4건

- 처분번호 17 : 농업 시설물 설치시 행정절차 미이행

- 처분번호 31 : 사망자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 부적정

- 처분번호 54 : 지방어항 개발에 따른 진입로 미개설

- 처분번호 70 : 도로대장 미작성에 따른 도로현황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정기감사 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조치가 지연되거나 처분 요구한 바대로 이행치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처리

행정사무감사규정(행정안전부 훈령) 및 시 행정사무감사규정 등의 관계규정에 따르면 수감기관에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분 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수행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감기관에서는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 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위법사항을 묵인하거나 고의로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시 정기감사 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 중 4건에 대하여 2008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고 조치를 지연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용진군에 대한 정기 감사 결과 “○○ 7 리 경로당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에서 콘크리트를 타설 하면서 다짐을 소홀히 하여 콘크리트가 충전되지 않았고, 더욱이 루프드레인 17개를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등 부실시공을 하여 시공사와 건설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처분요구 하였음에도,

용진군(재무과)에서는 2006.12.12. 시공사와 기술자의 의견진술만을 참고하여 “**부실벌점 부과검토 운영위원회**” (건설과장, 녹지조성팀장, 지원사업팀장, 토목팀장, 주택건축팀장)를 구성하는 한편, 같은 날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5인 만장일치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시공사와 기술자 모두 “**경고**” 처분만 한 채로 종결된 것으로 처리전말을 제출하는 등 감사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르면 부실벌점 책정이나 부실벌점 부과에 따른 의견을 검토할 경우에는 “부실벌점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기준에 따라야 하며,
- * 그 기준은 “시공평가결과 점수가 95점 이상인 현장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결과 평균점수 90점 이상인 업체의 경우, 우수 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수여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처 분 요 구]

1. 용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해양수산과장 및 건설재난과장은

○ 2006년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중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항” 작성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2. 용진군 기획실장은

○ 2006년 정기감사 결과 처분요구한 사항중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토록 촉구하는 한편, 2008년 정기감사 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처리전말 제출시에 2006년 처리전말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태만히 처리한 지방시설주사보 김○○, 지방농촌지도사 이○○, 지방별정7급 김○○은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담당 지방시설주사 노○○는 2008.9.30. 퇴직)

○ 또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지방시설주사 최○○ (現 인천전문대 소속) 및 지방시설주사보 김○○(現 종합건설본부 소속)는 각각 “훈계” 처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년 이상 장기 미집행 사항

【제 목】 0000 00000 0000000000 [처분요구 번호] - 처분내용 요약					
처분요구일	부서/기관명	행정상조치요구	재정상조치요구		비고
			조치방법	금 액(천원)	

☐ 그간 추진경위

○ 주요사항 요약

☐ 관련부서 의견 : 담당(0000과, 00 7급, 000, 행정전화)

○ 조치 지연 사유, 문제점 등 간략히 기술

☐ 향후 조치계획

○

예산·회계분야

[일련번호 : 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바지락종패 살포사업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옹진군에서는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바지락종패 살포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을 보면 지역어촌계 및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바지락 종패 살포 예산을 확보한 후 어촌계별 취득하고 있는 바지락양식 면허 면적 등에 따라 종패 살포량을 차등 결정하여 사업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토록 어촌계에 통보하며, 사업자 선정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선정 이후 사업자(어촌계)는 종패납품 업체로부터 견적서등을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며, 군에서는 타,시도 바지락 입찰가격 및 전국생산 단가등과 어촌계에서 제시한 단가와 비교하여 단가가 과다책정 되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결정을 하게 되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어촌계에서는 종패생산지에 대한 현지확인등을 거쳐 납품 업체와 계약체결 후 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군에서는 감독(물품검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어촌계에서 지정한 날짜에 종패생산지역에서 살포지역(현지 어촌계 면허어장) 까지 계약된 종패의 수량, 규격등을 준수하여 살포하는지 여부등을 검사하며 이때 종패수량 확인 방법은 국가공인계량소에서 종패운반차량에 대한 계근 (전체중량-공차중량)을 실시하여 계약된 물량을 확인합니다.

살포완료 후 어촌계(사업자)에서는 종패계량증명서, 관련사진등을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게 되며, 웅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준공서류 및 감독공무원의 출장복명서 등을 첨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조금을 지급 함으로써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등을 통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바지락 종패살포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주관기관 (집행주체)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하고 있으나 웅진군 해양 수산과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관내 어촌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어촌계에서는 전문적인 입찰능력등 가격조정의 역할이 미흡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촌계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 웅진군이 사업주관기관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동안 바지락종패 살포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보조사업자(어촌계)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실적보고서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하고 보조사업의 수행사항을 매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출장복명서로 가름함으로써 보조금 사용집행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농림수산식품부(구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에 따라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바지락 종패살포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주관기관(집행주체)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 시행하시기 바라며, 계약에 있어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시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공사 하자(만료)검사 소홀

[현 황]

“ 별첨 ”

[위법부당내용]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하자검사)에 의거 하자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 및 기록관리 하지 않고 있으며, 2002.5.30일 준공된 「△△△간연도교보강공사」에 대해서 2002.5월부터 2009.7월까지 하자기간임에도 2006년도 하반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는 등 2006년에는 295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미시행하였고, 하자 만료검사 대상 총 111건('06년 하반기 41건, '07상반기 28건 , '07년 하반기 19건, 2008년 상반기 26건)중 111건에 대해 하자 만료검사를 미실시하는 등 별첨 현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하자검사) 규정의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하자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하자검사(만료) 대상 공사 현황(06.1~08.8)

○ 하자검사 총괄현황

현황	계	2006 하반기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비고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대 상		295	248	244	263	
시 행		-	248	244	263	
미시행		295	-	-	-	

○ 하자 만료검사 현황

현황	계	2006 하반기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비고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대 상		41	28	19	26	
시 행		-	-	-	-	
미시행		41	28	19	26	

○ 하자 발생 현황

현황	계	2006 하반기	2007 상반기	2007 하반기	2008 상반기	비고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대 상		1	4	8	14	
보수시행		1	1	2	-	
미시행		-	3	6	14	

○ 하자 보수 현황(06년)

연번	공 사 명	계약금액 (천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내용
			착공일	준공일	준공 검사	
1	○○2리 경로당 신축공사	154.501	06.11.10	06.11.30	06.12.	바닥배관 누수

○ 하자 보수 현황(07년)

연번	공 사 명	계약금액 (천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내용
			착공일	준공일	준공 검사	
1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공사(인천○○○ 호)수리	3,719,000	07.04.20	07.04.25	07.05.10	갑판 부분 파공사리 외
2	◆◆도 채광지 보완 복구공사	272,340	07.10.22	07.11.15	07.11.20	해송 50본 식재
3	□□ 해수욕장 쉼터 조성공사	155,684	07.10.22	07.11.15	07.11.20	해송 14본 식재

○ 하자 보수 현황(08년)

연번	공 사 명	계약금액 (천원)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내용
			착공일	준공일	준공 검사	
	-	-				

[일련번호 : 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불이행

[현 황]

○ 수의계약내용의 미공개 현황

《기간 : 2006. 7. ~ 2008. 8. 31까지》

구 분	2006		2007		2008	
	계 약	공개누락	계 약	공개누락	계 약	공개누락
합 계	11	6	60	43	61	54
공 사	4	1	37	20	14	9
용 역	6	4	19	19	31	29
물 품	1	1	4	4	16	16

[위법부당내용]

각종 계약업무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보장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그리고 행정안전부예규 제204호(2006.2.7)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공통사항으로 계약 금액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내역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공개내역서에는 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또는 예정금액) 및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 계약의 근거,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등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용진군 재무과에서는 상기 현황과 같이 2006~2008년도 수의계약에 대하여 총 103건에 대해서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을 미 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시 공개내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확보에 노력하시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 계(1명)

[제 목] 하도대금(선금) 지급여부 확인 소홀

[현 황]

하도계약체결 선금지급 현황

(기간:2007~2008)

(단위:천원)

사업명(도급자)	선금액	선 지 급 일	하도급업체명	계약일	계약통보일	대금지급액	지급일
○○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1차) [(주)◆◆이앤씨]	934,000	2007.04. 30	○○석산건설(주)	2007.04. 24	2007.05. 14	340,800	2007.05. 03
			◆◆환경(주)	2007.07. 04	2007.07. 24	-	-
			(주)□□개발	2007.06. 25	2007.07. 24	-	-
○○ 하수종말 처리시설공사 (2차) [(주)◆◆이앤씨]	219,000	2008.05. 22	△△건설(주)	2008.03. 14	2008.04. 10	32,900	08.05.23
			○○석산건설(주)	"	"	25,000	08.05.23
			◆◆건설(주)	"	"	47,000	08.05.23
			△△ ELD	"	"	36,000	08.05.26
△△리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종합건설(주)]	175,000	2008.06. 18	(주)□□엔텍	2008.04. 17	2008.05. 13	-	-
			☆☆건설(주)	2008.04. 28	2008.05. 13	-	-

[위법부당내용]

《 하도급대금의 지급 확인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4호에 의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의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직불 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2007.3.28 계약금 2,598,300천원에 ○○이앤씨(주)와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급사인 △△환경(주), (주)☆☆개발과 하도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4.30일 934,000천원에 대한 선금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하도업체에 대한 시공부분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금지급 관리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선금지급검토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안부예규)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금액, 이행기간, 잔여기간 등 최소한도의 선금신청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예규 제7조(선금지급조건)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 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선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 조건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검토사항을 바탕으로 지급조건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선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예규 제4조(선금의 사용)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387,806천원에 『□□리 방파제 연장공사』를 계약하여 시행하면서 2007.8.2 계약상대자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액 387,806천원에 대한 192,500천원의 선금, 사업비의 49.63%의 선금을 신청 받고 선금지급검토서에 의한 내부검토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선금지급조건 통보 없이 2007.8.3 선금 192,500천원을 지급 하는등 내부적으로 선금지급검토서 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07.11.23일 계약금액250,528천원으로 「북도면 장봉리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대한 선금금 110,000천원(43.9%)을 2007.12.5일 지급함으로써 동절기 및 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공정율을 감안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선금지급에 대한 검토없이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규정에 따라 대가지급에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357천 원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조달물품대금 지연 납부 및 공금 또는 자비로 연체료 납부

[현 황]

○ 관급자재 납부현황

《기간 : 2006. 7. ~ 2008. 8. 31까지》

연 번	공 사 명	지 급 액	지 급 기 한	지 급 일 자	가 산 금	가산금 납부여부	비 고 [담당자]
계	10건				599,760		
1	○○리 경로당 신축공사	12,969,980		2008.05.09	63,160	본인 부담	
2	◆◆ 호안도로 개설공사	33,068,620	2007.08.22	2007.10.04	164,520	예산	
3	◆◆ 호안도로 개설공사	38,702,510	2007.08.22	2007.10.04	192,540	예산	
4	○○○ 진입로확포장및 호안옹벽보수공사	14,830,350	2008.08.18	2008.08.25	14,810	본인 부담	
5	△△항 선착장 진입로도로 포장공사	8,254,640	2008.06.12	2008.07.09	41,060	본인 부담	
6	☆☆면 낙석위험지역해소 사업	8,989,640	2006.09.14	2006.10.10	8,980	본인 부담	
7	☆☆면 낙석위험지역해소 사업	13,804,250	2006.12.14	2006.12.26	13,800	본인 부담	
8	□□리 배수로 정비공사	35,609,640	2006.09.20	2006.09.26	35,600	본인 부담	
9	○○천 정비공사	10,464,680	2006.09.29	2006.10.26	52,320	본인 부담	
10	교통안전시설사업 확충공사	12,983,920	200.712.26	2007.12.28	12,970	본인 부담	

[위법부당내용]

「조달사업법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조달청 고시)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한 모든 전자입찰에 대하여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같은 지침 제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전자입찰을 집행한 건수에 따라 월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8조에 의하면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의 납입기한 및 연체료는 「조달물자대금 연체료 부과 시행세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6.7월부터 감사일 2008.9월 현재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조달물품을 구입한 후 납부기한 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현황과 같이 수납연체료를 공금 또는 자비 등으로 충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예산으로 집행한 진두 호안도로 개설공사등 2건 357,060원에 대해서는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127천 원 추징, 8,230천 원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체상금 부과 및 지급 부적정

[현 황]

《 ○○리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

○ 계약 및 이행현황

- 계 약 금 : 50,742,620원

(수집운반 ◆◆토건중가₩38,972천원 중간처리 - △△공사₩11,770천원)

- 계약기간 : 2007.12.1 ~ 2008.1.29

- 준공검사 : 2008. 2. 5

○ 지체상금 부과 현황

- 실제 지체상금 부과액(실준공일 기준) : ₩761,140원

→ 50,742,620원 × 2.5/1000 × 6일(7일)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0조(지체상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0조(지체상금)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 75조(지체상금률)에는 지체상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지체일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리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발주하여 2007.12.1 계약금액 50,742천원에 ◆◆토건중기(주), △△공사(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도급사가 준공기한인 2008.1.29을 경과하여 2008.2.4일 준공계를 접수하였고 2008.2.5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준공기한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의 기간(6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했으나 실질적인 지체일수는 7일로 1일 126,830원을 부족하게 부과하고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을시 준공금 지급대가시 상계할 수 있으나 2007.7.23일 △△건설(주)과 587,873천원에 계약체결한 「◆◆선착장 연장공사」에 대한 준공기일을 14일 지체함으로써 8,230천원에 대한 지체상금을 상계 처리해야 함에도 업체의 준공금 지급 요청에 따라 2008.5.7일 준공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체상금 8,230천원이 미수금으로 남아있어 대가지급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리 상하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에 따른 지체상금1일 126,830원에 대해 추징하시고, ◆◆선착장 연장공사 지연으로 지체상금 지급된 8,230,000원은 회수조치하시기 바라며,
2.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정산시 부가가치세 미 환급

[위법부당내용]

○ 민간자본보조사업 부가가치세 미 환급 현황 (금액 : 천원)

사업기간	예 산 액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미 환급액				비고
	총 액	보 조 금	자 부 담	품 목 명	세금계산서 표기내용			
					합계액	공급가액	부가세	
2007~2008	2,425,417	1,931,585	493,832	파이프 비닐 부속자재	1.033,848	939,137	94,711	

민간자본보조(402-01) 예산으로 농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이행할 때에는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에 의하여 해당 농업용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농림사업자금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자로부터 환급금을 보조금 비율로 회수하여 당해 년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과목에 ‘여입’을 시켜야 하며, 과년도분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라면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웅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7년 1월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내풍형 비닐하우스 설치 등 15개 사업을 총 소요 예산 2,425,417천원 (보조금 1,931,585천 원, 자부담 493,832천 원)으로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비닐, 농업용 파이프 등 품목을 총 1,233,848천 원에 구입하고 발생한 부가가치세 총 94,711천 원(보조 58,428천 원, 자기자본 36,283천원)을 기한내(농어민은 기자재 구입일의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했으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를 농업인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환급 받지 못함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비율로 회수하여야 할 58,428천 원을 정산시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농민에게는 자기자본 36,283천 원의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추진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사업종료 후 마땅히 회수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관련자 들을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문화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 해오름 축제 보조금 정산 소홀

[위법부당내용]

민간행사 보조(307-04)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아니 되며,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간행사 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자본적 경비로는 집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보조금 교부조건에도 이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의 정산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한,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 직접 집행 하여야 합니다.

웅진군 관광문화과에서는 “○○도 명소 만들기 위한 해넘이 해오름 축제 계획 [관광문화과-10975(2007.12.26)]”를 수립하고 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2007년도 세출예산 민간행사보조(307-04)에 15,000천 원을 편성하여 이작도 해맞이 축제 추진위원회를 사업자로 선정 2007.12.31 ~ 2008. 01.01까지 대이작도 부아산 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해오름 축제를 위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민간행사 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로는 지출을 할 수 없음에도 보조금 총 10,000천 원중 자본적 경비로 총 8,973,150원(그릇세트 5,410,000원, 대형천막 2,400,000원, 전기 히타 28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의 정산에 관한 서류로는 사업자가 적법 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 하였는데도 웅진군 관광문화과에서는 이를 지적하거나 확인치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정산을 처리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개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금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용자금 예산 및 지출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주민복지지원사업 용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금	비 고
2006	예 산 액	934,954	2,047,603	불용액 2,887,557
	지 출 액	15건 / 75,000	1건 / 20,000	
2007	예 산 액	1,004,641	2,118,369	불용액 3,003,010
	지 출 액	-	8건 / 120,000	
2008.8월	예 산 액	1,004,641	2,018,369	집행잔액 3,018,010
	지 출 액	1건 / 5,000	-	

[위법부당내용]

《 예산편성·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개발계획과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2006년도 불용액이 2,887,557천원(예산액 대비 96.8%)

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및 2008년도에도 예산을 과다 계상하여 2007년도는 불용액이 3,003,010천 원(예산액 대비 96.1%), 2008년도는 8월말 현재 집행 잔액이 3,018,010천 원에 달하였고, 이에 추경을 통한 감액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행잔액 전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용자대상사업 선정 부적정 》

용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면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용자하는 자금을 말하며,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용진군 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주변지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인으로서 사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용진군수가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용자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진군 개발계획과에서는 2007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8건 120,000천 원의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용자 지원함에 있어 1건을 제외한 7건 100,000천 원의 용자금이 사업용 전력공급 기업이 아니며,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사실조사 등을 통한)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관내 어업종사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선박수선, 어구구입, 실내인테리어 등의 사유로 기업유치지원사업 용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 용자금의 반환 및 사후관리 부적정 》

용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의하면 군수는 자금의 용자를 받은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수혜자의 타지역 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에는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웅진군 개발계획과에서는 2006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8건 185,000천원의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 지원·관리함에 있어 융자목적대로의 사용여부, 융자수혜자 타지역 진출여부 등을 사후관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지원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융자금 지원·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동일사태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현재 융자금 지원이 저조한 바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정정 입찰공고 부적정

○ 정정공고시 공고일수(5일) 미가산 현황

구분	공 고 명	당초공고일 (정정공고일)	변경사유
공사	○○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2007.10.10. (2007.10.19.)	기초금액 변경
"	새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2007.10.26. (2007.10.29.)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
"	◆◆면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2007.11. 8. (2007.11. 9.)	"
"	△△ 어촌체험어장시설 보강공사	2007.12. 6. (2007.12. 7.)	"
"	소규모 여객선 대합실 신축공사	2008. 3.25. (2008. 3.26.)	입찰참가자격 변경
"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공사	2008. 4. 1. (2008. 4. 7.)	낙찰자 결정방법 변경
"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시설공사	2008. 4. 1. (2008. 4. 2.)	기초금액 변경
"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2008. 4. 4. (2008. 4. 7.)	입찰참가자격 변경
"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2008. 4.23. (2008. 4.24.)	"
용역	◆◆면 군도6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008. 2.15. (2008. 2.21.)	"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입찰 공고한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웅진군 재무과에서는 발주자의 당초 입찰공고 오기로 인한 정정공고(공사 9건, 용역 1건)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정정공고 해야 함에도 당초 공고기간으로 정정공고 하는 등 입찰공고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입찰 공고한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 가산하여 공고토록 관련 법규정이 개정(2007. 9.20.)된 사항은 발주자의 오류로 인한 계약분쟁을 사전에 예방함과 입찰공고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인 만큼,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약내역서 작성소홀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내역 부적정 현황

공 사 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천원)	설 계 내 역 (원)		계 약 내 역 (원)		비 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도로 포장공사	08. 7. 9.~ 08.10. 6.	167,683	869,222	532,980	759,609	465,768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08. 4.25.~ 08. 7.23.	123,708	691,961	424,289	608,956	373,392	공사 중지
△△△ 사위장 신축공사	08. 5.14.~ 08. 7.27.	137,500	1,235,715	757,702	1,098,018	673,270	공사 지체
△△어린이집 신축공사	08. 8.11.~ 09. 2. 6.	449,626	4,612,847	2,828,453	3,966,453	2,431,877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7호)에 의하면 계약 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건설 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공고문 안내를 통하여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의 입찰금액 산정시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웅진군 재무과에서는 “○○○ 도로 포장공사” 등 4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입찰공고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시 보험료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안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투찰(낙찰)율이 적용 된 내역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중인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계약금액중 투찰율 적용으로 감액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당초 설계내역으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대금 지급시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 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호안도로 개설공사 관리·감독 소홀

○ 사업현황

- 공 사 명 : ◆◆ 호안도로 개설공사
- 공사기간 : 2007. 4. 2.~ 2007.12.28.
- 공사업체 : ○○건설(주) / 1,391,928천원
- 하도급 계약 : 2007. 5.25. (2007. 5.25.~8.30.) / 백령석산건설(주) / 178,530천원
- 하도급 변경계약 : 2007. 8.13.(2007. 5.25.~10.30) / 상동 / 298,980천원

[위법부당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 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하도급 계약 등의 통보서를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81조에 의거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 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웅진군 건설재난과 및 재무과에서는 “◆◆ 호안도로 개설공사”의 당초 하도급 계약통보(2007. 6. 5.) 사항이 2007. 8.13. 하도급 변경계약(미통보)으로 물량증가(운반 및 거치) 및 하도급 공사기간이 증가(2개월)되었고, 이후에도 2차 설계변경시 일부 물량감소(A타입 방괴블럭제작 163EA→153EA)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음을 기성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변경계약 사항 등을 통보받지 못할 시에는, 상기규정에 의거 건설공사가 성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변경계약사항 미통보에 따른 시정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공사 준공시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계약 및 감독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 동일사례 발생치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세입 11,092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소홀
[현 황]

○ 반환기간 경과후 5년간 반환청구없는 세입세출외 현금 등

구 분	금 액
반환기간 경과후 5년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	7건 11,092,600원
반환기간 미확인 세입세출외현금	3건 10,300,243원

- 세입세출외현금 공공예금으로 예탁한 현황 : 75건
-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시 이자 미지급현황 : 23건

가. 반환기간 경과후 5년간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의 군 귀속 소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옹진군재무회계규칙 제76조·제77조에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에 의해 반환하며,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웅진군청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하면서,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간 반환청구가 없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따른 적지복구비 등 7건 11,092,600원(이자 미포함)”에 대하여 군에 귀속시키지 않고 징수관에게 세입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면서 세부내역을 부기하지 않고 과목별 총액만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세입조치하지 않고, 계약보증금 등 3건 10,300,243원(이자 미포함)의 세입세출외현금은 반환청구대상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를 발생시켰습니다.

나. 세입세출외현금 예금 예탁 및 이자지급 부적정

웅진군 재무회계규칙 제85조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계약에 따로 정하거나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4>) ”에 따르면,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중 6개월이 상 예탁하는 것은 당해 자치단체 금고의 최고의 이자율로 예탁하고, 정기예금 예탁대상중 6개월 미만인 경우와 공공예금 예탁대상 이외의 모든 세입세출외현금은 별단예금 최고 이자율로 예탁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예탁자에게 반환시 이자를 지급하며, 원천소득세·의료보험료·기여금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예탁기간에 관계없이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웅진군청 재무과에서는 차액·계약·하자보수보증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예탁을 하면서, 예탁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별단예금으로 예탁 관리여야 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금 등 75건(2008.9.22 감사일

현재) 예탁금을 공공예금으로 예탁 보관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처리
통보에 따른 이행보증금 반환” 등 23건의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을 처리하면서
금고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등 세입
세출외현금 예탁관리 및 이자지급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반환기간이 경과한 5년동안 권리자의 반환청구
없는 세입세출외현금 7건 11,092천 원은 옹진군 세입으로 편입하시고, 반환기간
미확인 세입세출외현금 3건 10,300천 원에 대하여는 반환기간 등을 확인하여
세입편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하자보수보증금 및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등 현재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 75건은 정기
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예탁전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이월시
세부내역을 명기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시 생기는 이자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에 의거 처리하시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용진군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체납 과태료 대납업무 소홀 및 과태료 체납처분 부적정
[현 황]

○ 체납 과태료 대납 공금계좌 잔액현황

구 분	공금계좌	대상기간	예 금 잔 액
계			283,15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점검 미이행 과태료	농협중앙회 180-01-*****	2007.4.16~ 2008.9.10	과태료 10건 278,250원 이자수입 3건 4,900원

○ 독촉 지연 및 독촉하지 않고 체납처분 현황

구 분	독촉 지연	독촉없이 체납처분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점검 미이행 과태료	2008년 부과 399건	2007년 부과 164건

가. 체납과태료 대납업무 소홀

용진군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동차정기검사 미검사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납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납부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용진군청 지역경제과 공금계좌로

과태료를 입금 받은 후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대신 납입조치하는 방법으로 대납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그 밖의 세입을 직접수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용진군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대납업무를 처리하면서, 대납상담시 입금자에 대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록·관리하여 지체없이 용진군청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납상담시 과세물건 및 납부자명과 함께 입금자 성명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관리하지 않아 위 현황과 같이 2007.4.17일 부터 2008.9.10 현재까지 공금계좌로 입금된 10건 278,250원을 공금계좌에 그대로 방치하여 체납액 대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처분 부적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6항에 의하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며, 지방세법 제27조·제28조에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진군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징수·체납처분을 하면서, 2008년도 부과 미수납 399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함에도 미발부하였으며, 2007년 부과 미수납 164건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과태료 체납처분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경제과에서는 과태료 최초 대납상담시에 대납 요청자에 대한 인적사항(연락처 필수)등을 기록·관리하여 즉시 세입조치하시고, 위 공금 계좌에 보관중인 과태료 10건 278,250원 및 이자수입 3건 4,900원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등을 취하시고,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점검 미이행 과태료 2008년 부과 체납 건과 독촉없이 체납처분한 2007년 부과 건에 대하여는 독촉절차를 이행하는 등 시정조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외수입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 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미배정 정수물품 구입예산계상 등 물품관리 소홀
[현 황]

구 분	물 품 내 역
○ 미배정 정수(정수 배정전) 물품 구입예산 계상	중형컴퓨터 등 7개
○ 미배정 정수 물품 취득 및 구입예산 계상	비디오프로젝터 2개
○ 자산취득비 구입물품 장부 미작성(전산 미입력)	휴대전화기 16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옹진군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 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주관과장이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리관은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으나,

웅진군청에서는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비디오프로젝터 2대의 구입예산에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하였으며, 정수관리대상물품은 정수배정 되었음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상하여 그 집행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형컴퓨터 등 7개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 정수배정전 구입예산을 계상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웅진군 물품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조례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도서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분임물품출납원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웅진군청에서는 물품(비품)에 대하여 각종 대장을 대신하여 서울행정시스템(물품관리)으로 전산입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기 16대에 대하여 전산미입력하여 2008재물조사시 누락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웅진군 재무과에서는 정수물품 물품구입시 정수배정여부를 정확히 심사하시기 바라며, 미승인 정수물품 3대에 대하여는 추가배정 조치하시고,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자산취득 휴대폰 16대에 대하여 전산입력처리토록 하고, 정수배정전 예상계상부서 및 물품구입 기관(부서)에 주의촉구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행정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현황(2007.1 ~ 2008.8)

(단위:건/천원)

구 분	경조사비	난구입	직원격려	비고
업무추진비 집행	58/2,900	14/1,160	71/8,257	

2. 내 용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주빈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된 공금임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공적이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업무추진비의 사적집행

2006. 5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로써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의한 기준에 맞게 집행하되 기관으로서 공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고, 2008.3월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축의·부의금품은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또는 결혼의 경우에 지급할 수 있되, 공무원 명의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상의 범위를 소속 상근직원(본청 및 지방의회, 사업소, 시·군·구의 경우 읍·면·동 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유관기관의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2007.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유관기관의 관계자 아닌 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으로 58회에 걸쳐 2,90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행동강령기준 위배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7조에서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나, 소속기관장의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7.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기준에 초과하여 축하 난 등을 개당 7~10만원 상당으로 14회 1,160천 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업무추진비 집행과목 적용 부적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추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되어야 하며, 시책사업과 관련이 없이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격려 등의 경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2007.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직원격려 간담회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71회 8,257천 원을 집행하는 등 관련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위배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위배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분야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유재산 위임관리 민간위탁 전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단위 : m², 천원)

구분	필지수(계)	면적	재산가액	비 고
옹진군	676	565,732	4,985,707	

○ 국유재산 관리이전 재산 중 재검토 대상 : 불임

재정경제부에서는 「국유지 관리제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국유지를 전문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확대하기로 결정(2005.4.1. 경제정책 조정회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중 유희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이전하도록 함에 따라

옹진군에서는 자체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최종 676필지 4,985,707천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관리이전하기로 결정(2008.2.4.) 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관리 이전 하였음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에 이전한 국유재산 중 일부는 자연발생유원지 일원에 위치한 토지, 가로공원, 어촌종합시설, 항포구 주변에 위치한 국유재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농·어민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는 활용도가 높은 재산으로 관리 이전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용진군에서 지난 2008년 2월 4일 자산관리공사에 관리이전 시킨 국유지 676필지 565,732㎡에 대해서는 향후 용진군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에 필요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전시킨 토지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공유(잡종)재산 무단점유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점유실태	비고
1	덕적면 ○○리	540-55	대지	141	주택부지	
2	"	540-56	대지	86	주택부지	
3	영흥면 ◆리	607- 3	전	1156	대지로 사용	
4	영흥면 ●리	415- 2	전	2043	전(田)으로 사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재산의 범위·조사기간·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게 의뢰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재산관리관은 잡종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옹진군에서는 옹진군 덕적면 ○○리 540-55. 141㎡, 540-56. 86㎡ 위 지상에 건축물(주거)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흥면 ●리 607-3. 1156㎡는 건물 및 경작, 영흥면 ◆리 415-2, 2043㎡은 일부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등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웅진군에서는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임대계약 및 변상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현장확인을 통하여 사실 확인 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국유재산 대부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국유재산 대부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하고,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당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는 당해재산을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인 북도면 ○○리 150-11번지(지목:임야)를 2005년 5월 25일 신◆◆(○○리161-9 거주)이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여, 2005년 5월 30일부터 향후 5년간 대부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번지는 소나무 및 잡목이 무성하여 경작을 한 흔적이 없으며, 관련법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대부 이후 현장실사등을 통하여 대부자가 대부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등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박○○은 본인소유 토지인 북도면 ◆◆리 333-3번지에 건축을 하고자 인접 국유지인 523-46번지(지목:임야)의 일부(114㎡)를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를 2번에 걸쳐 신청한 바 있으나, 국유지상에는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을 받았음에도 민원인(박○○)에게만 통지('06.12.12)하고, 건축허가 부서인 ◆◆면에는 동 내용을 알려주지 않음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한 박○○이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하였다면 사후 원상 복구하는데 커다란 행정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용진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유재산 대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 면사무소와 연계하여 국·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2. 아울러 대부계약이후 경작을 하지 않고 있는 북도면 ○○리 150-11번지(신◆◆)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북도면 ○○리 523-46번지는 국유재산은 진입로로 임대 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부서인 북도면에 통지하여 국유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 할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행정절차 소홀

[위법부당내용]

○ 국·공유재산 대부 건수

국유재산				공유재산			
계	1개월전	1월이내	계약체결 이후	계	1개월전	1월이내	계약체결 이후
20건	2	16	2	35건	4	19	12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하고,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상태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고, 당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4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31조 에는 대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1월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웅진군 재무과에서는 2006년 9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대장, 지적도등 각종 공부의 대조 확인과 현지실사를 통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국·공유재산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지 않은 채 공부상으로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계속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갱신을 신청 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갱신을 해주어야 함에도 영흥면 ○○리 729-5번지(김◆◆)등 35건은 계약만료 1개월 이내에, 덕적면 △△리 540-54번지(박□□)등 12건은 대부계약체결 이후에 국·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을 받는등 총47건을 처리하는등 국·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대부계약 체결시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상 조치] 개선(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시설)운영 소홀

[위법부당내용]

○ 장봉헤림 보호작업장 현황

시 설 명	시설장	소 재 지	설 립 연월일	종사자 현황				입소자 현황								비고 (정/현원)
				계	관장	직업훈련교사		계		1급		2급		3급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보호작업장	이◆◆	북도면 △△리산30번지	'99.1.1	4	1	2	1	22	8	15	6	6	2	1	-	40/30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보호작업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호작업장 프로그램은 사업장 내의 보호된 환경에서 작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과 보호작업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별로 종사자 배치기준을 보면 실제지원은 연도 초(1/4분기)의 인건비 교부시기의 장애인근로자수 및 자폐성 장애인수 등 지원기준에 따른 실제소요액을 파악하여 시행해야 하고, 보호작업장의 직업훈련교사 지원기준은 장애인 12인당 1인의 직업훈련교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수가 지원기준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장애인 18인부터 2인, 근로장애인 30인부터 3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선발 및 퇴소와 복무를 규정하고 있는 ○○보호작업장“근로 장애인 복무규정”과 “근로 장애인선발 및 퇴소규정”에 의하면 복무규정 제4조(근무시간)에 근로 장애인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근무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지정된 출근시간 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고지하고 정오까지 고지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보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으며(제6조 : 결근) “근로 장애인선발 및 퇴소규정” 제6조(퇴소절차)에는 근로 장애인 본인의 의사나 보호자가 퇴소를 요청한 경우와 장기무단결근자, 계속적으로 지도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퇴소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보호작업장의 경우 입소자(근로자)의 대부분이 지능지수가 34 이하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1급 지적장애인(총 30명중 21명)으로 직업재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업성과가 미비하며, 직업재활 훈련교사도 근로장애인 30인 이상 3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근로장애인 임금 지급내역과 근무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총 30명중 박◆◆외 9명은 2008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할 정도의 근로능력이 없는 입소자로 직업재활 훈련교사 추가지원기준에 현격히 미달되며,

입소된 장애인의 근태를 확인해본 결과 오△△외 32명은 3일 이상 장기무단 결근으로 내부운영규정(근로 장애인 선발 및 퇴소규정)에 의거 퇴소등의 조치와 모집 공고 등을 통해 당초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기능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보호작업장의 경우 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과 운영효과가 미비한 만큼 향후 ○○재활원이나 요양원에 별도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는 방안과 직업재활교사 초과인원(1명)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운영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의 상근의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 재활원 시설장 출장내역(‘08. 1. 1 ~ 6. 30)

시설구분	기관명	시설장 (생년월일)	주 소	출장내역(08. 1. 1 ~ 6.30)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지적장애 생활시설	○○ 재활원	임◆◆ (☆☆.☆☆.☆)	북도면 △△리 105-1	121/55	22/14	18/8	21/8	20/6	20/4	20/15

※(/)는 근무일수/출장일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1항 및 보건복지부 발행 2007년도 2008년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계획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 시간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공무원에 준하여 [평일 09시~ 18시, 토요일 09시~ 13시(주5일 시행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장의 타 직종 겸직과 관련한 설명에서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와 시설장을 겸직하여 상근 시간내에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명예직,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영리추구가 현저하지 않거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은 시설장과 겸직이 가능하고 출강 등 외출시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과도한 출강등으로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근의무 위반이 되고, 임명직 시설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겸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 ◆◆재활원(시설장 : 임△△)의 경우 시설장은 그 시설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대외적인 대표자의 지위, 직원총원 및 면직에 관한 사항, 지역 자원개발-후원자, 자원봉사자, 간부회의 및 전 직원의 회의 진행사항, 직원관리를 위한 면담사항」 등 시설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상근이 필요하나

2007년도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체복무점검 시 출장명령부에 대필기록하고 결재 없이 “장애인 지침개정 협의 및 (사)한국장애인 시설협회 해외연수 명목으로 6박7일간(해외연수 : '07. 12. 20 ~ 23 3박4일)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으며,

2008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출장현황을 보면 총 근무일수 121일중 절반에 가까운 55일(45%)을 시설운영과 관련한 명목하에 상근 근무하지 않고 국내외 출장을 다녔으며 특히 금년 6월의 경우는 총 근무일수 20일중 15일을 해외연수 명목과 국내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등 시설장의 상근의무를 소홀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 재활원 시설장(임◆◆)에 대해서는 “엄중경고”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교체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능보강사업(직원숙소 신축공사)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재활원 직원숙소 신축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예산액	계약내용				선금급 지급 내역			중도금지급		비고
		계약금액	계약일	준공일	계약자	지급액	비율(%)	지급일	지급액	지급액	
직원숙소 신축공사	90,000	66,174	07.8.17	07.11.30	△△종합 건설(주)	37,617.5	56.84	07.8.27	14,278.5	07.9.20	

○○재활원에서는 2007년도 부족한 직원숙소 확충을 위해 “직원숙소 건축공사(기능보강사업)”를 시행함에 있어 모든 시설공사는 부실공사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착공과 동시에 공사감독관을 지정하고 준공 검사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7조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관을 임명하여 완벽한 시공여부에 대한 검사와 검사조서를 작성·확인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공사의 선금급을 지급할 시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0조 (지출의 특례) 제1항10호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2007. 8. 27일 선금급 지급시 계약 금액의 56.4%에 해당하는 37,617,000원을 지급하고, 2007년 9월 20일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중도금명목으로 집행시(14,278,500원)에는 기성부분 감사원 임명과 기성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능보강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향후에는 회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2007년도 경로당 환경개선(경로당 유지보수)사업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해당면	경로당명	보조금 신청시 사업내용	보조금 결정액	실 제 사업내용	사업비 지출액	비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북도면	○○리	물탱크 교체, 화장실 수리	4,000	수도관 배관공사	3,970	
	대청면	◆◆4리	도배, 보일러실 외부설치, 싱크대 환기통 설치	5,200	도배, 싱크대 환기통 공사, 방 등, 램프교체	5,200	
		△△5리	도배, 창문틀턱받이 설치, 화 장실세면대 제거, 전화선교 체, 욕상문 교체, 물탱크 (배관공사)	3,520	도배, 세면대 철거 및 샤워꼭 지 교체, 배관보수, 방수, 도 장공사, 방수제 공사, 방화문 교체, 양변기 커버설치, 타일 압착 붙임	3,520	

2007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계획 [옹진군 주민생활과 -2400(2007. 4. 9)] 에
의하면 관내 노인분들의 쾌적한 여가생활 공간 및 문화시설을 제공하고자
2007년도 경로당 환경사업을 시행하며, 각 면별 경로당 환경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1)경로당 유지보수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조정하여
결정하고, 2)유지보수 결정은 신축년도 및 노후 상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3)보수되지 않으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개보수신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4)신청금액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서는 본 계획서에 의거하여 2007. 4. 13일까지 북도면외 4개면사무소 (북도면 2개소, 연평면 2개소, 백령면 6개소, 대청면 5개소, 덕적면 4개소)에서 경로당의 개보수와 관련하여 총 70,000천원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보조금이 결정·통지된 절차를 보면 경로당별로 사전 사업물량을 조사한 후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해 면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면별로 3,000천원 ~ 10,200천원의 사업비를 교부 결정하고 사업비를 면사무소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용진군보조금관리조례 제12조를 보면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북도면과 대청면의 2007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보조금 신청시 면 장의 사업적정성에 대한 의견서까지 제출해서 보조금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다르게 시행 되는 등 보조사업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보조금의 집행절차에 적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전 사업물량을 파악시에는 보다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이 임의적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분야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관련부서 : 기획실,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 현황]

옹진군 보건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4팀 60명(정원 63명)이 합심하여 도서지역이라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시설의 확충(백령지소, 소야·백아진료소 신·증축), 무의도서 병원선 운항, 종합검진차량 운행,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군 재정을 활용한 의치·보철 노인 수혜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말라리아 발생억제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등의 사업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솔선 수행하고 있으나,

2008. 8월 조직개편으로 위생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됨으로써 일면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통합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향후 면사무소와 업무협조 등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고, 또한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강구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위법 부당내용 :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1. 면사무소 및 보건지소로의 사무위임 및 업무협조 등에 관한 사항

옹진군은 본청과 7개 면사무소 및 2개 출장소로 조직되어 있고,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7개 보건지소, 8개 보건진료소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사업의 경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는 진료·예방접종 등의 의료사업만 관장하고 보건

행정업무(* 예로 정신보건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의·약업소 관리 등)의 경우에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위임하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어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많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바,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백령, 대청, 연평, 덕적 등 인천연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의 경우 면사무소나 보건지소로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면사무소나 보건지소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무위임을 못하고 있으며, 업무 협조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건지소나 진료소의 인력 확충이나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 예로 방역사업의 경우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차량이 없어 방역사업을 위하여 주민 차량과 운전원을 매년 1억여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 임차료 16대 150일분 6천만원, 방역차량 운전원 인건비 10인 120일분 3,6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면사무소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음에도 면사무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약 부족 등으로 인하여 매년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됨**

*** 이와 관련 2006년 종합감사 시에도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표본으로 연평면 감사)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면사무소에 쓰레기를 수거·운반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도서주민의 차량 임차료와 운전원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집행함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군 자원의 근본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면별 관용차량 및 운전원 현황 : 별첨)**

2.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한편 옹진군 보건소에서는 2008년 중점사업인 “고혈압 관리사업”추진을 위하여 방문 전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코자 공고를 하였으나, 도서지역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2명만 지원하여 2명분의 국·시비를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금연상담사의 경우에도 1명만 지원),

웅진군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예로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로 완화), 봉급 현실화(* 승선료 지급 또는 도서근무 수당 지급 등) 등의 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 2007년 보건의료시행계획 평가결과 고혈압 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의 경우 전담인력 부족이 부진요인으로 평가되어 전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확충코자 하였으나, 도서지역 출장이 잦다는 이유로 지원자가 없음**

3. 무의도서 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한편 웅진군의 보건의료기관 분포현황을 보면, 보건소 1, 지소 7, 진료소 8, 종합병원 1, 의원 2 개소가 운영중이고, 북도면 시도(주민수 283명), 모도(105명), 소연평도(129명), 덕적면 문갑도(88명), 울도(58명), 굴업도(19명), 지도(20명), 자월면 대이작도(205명), 소이작도(99명), 영흥면 측도(62명) 등은 보건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의료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 1회 병원선을 운항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 2006년 종합감사 시에 무의도서에 대한 보건진료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보건의료기관 확충이 지연되고 있으며, 더욱이 관련 법령(지역보건법)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을 인구수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4. 의료 전문인력 및 공중보건의 확충에 관한 사항

아울러 웅진군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수혜자(55세 이상) 외에 군 자체 재정으로 수혜자를 4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의치·보철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없고, 또한 치과위생사 등 관련 면허 소지자 부족으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도서지역에서

웅진군 보건소로 나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이에 따른 여비·숙박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내소 하여 진료를 받는 주민이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승선료는 도서 주민들에 한하여 일괄적으로 5,000원을 받고 있으나, 기타 식비, 숙박비 등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진료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처 분 요 구]

1. 웅진군 기획실장 및 보건소장은

- 보건·위생 사무의 면 또는 지소 위임 등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량임차료 및 인건비(민간인 운전수) 등 비경제적·비효율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수당과 관련,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승선료, 숙박비 지급 등 수당 현실화 방안을 마련, 시행하시기 바라며,
- 보건지소나 진료소 설치기준 완화, 의치·보철 전문의 자격증 소지 공중보건의 확보, 치과위생사 등 전문인력 확보 등 무의도서 진료체계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웅진군 재무과장은

- 면별 차량 및 운전원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바다쓰레기 수거사업, 방역사업 등 웅진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활용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관련부서 : 기획실,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병원선 관리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병원선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공선에 대해서는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관계법령 : 「선박안전법」,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49호. 2000.4.24)」

위 법령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에 대해서는 관공선 보유관서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년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하고, 사용관서에서는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하며, 동 계획에는 관공선 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 예산집행 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사항, 예방정비·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2007년 및 2008년에는 관공선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06년에는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 동 건은 2006년 옹진군 종합감사 결과 확인서 징구 후 시정 요구한 사항이나 병원선 관리 강화 자원에서 별도로 확인서를 징구, 저분코자 함

2. 병원선 수리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을 관계법령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제한하고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적격심사에 따른 공사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선박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공사실적을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심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르면 “각종 공사의 경우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웅진군 보건소에서는 2006.9.6. 병원선 수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공장등록(조선소)을 필하고, 사업자 등록을 강선건조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총 톤수 111톤 이상의 선체 상·하가 능력이 있는 수리제조업체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관내인 자로 최근 3년 이내에 동력선반 수리부분에 단일 건수로 2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기술보유현황과 공사실적을 동시에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제한하였고,

또한 동 공사계약의 경우 기초금액 38,943천원으로 적격심사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입찰참가 자격조건인 단일 건수 2천만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계약을 하였어야 함에도 공장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울러 2007.9.17. 병원선 수리 공사를 발주함에 따른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장의 업종이 강선건조 및 수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로서 총 톤수 111톤(선미 흘수 3m 이상) 이상의 선체 상·하가 능력이 있는 수리·제조업체이어야 하며, 본 선박의 주기관(CAT 3516, 2200HP) 및 보조기관(CUMMINS 6BT 5.9T 69KW) 동등 이상의 수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역시 기술보유 상황과 공사실적을 동시에 제한하였고,

또한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공사실적 금액합계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비의 50% 이상에 해당되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낙찰자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에 의하면 낙찰자가 수행한 공사 선박의 주기관 및 보조기관의 마력, 크기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동등 이상의 공사실적 금액만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모든 공사실적을 인정하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계약자인 (주)○○○개발 측에서 제출한 공사 실적중 동등 이상의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실적을 제외하더라도 공사실적 금액 합계가 당해 공사 추정가격의 50% 이상이므로 적격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병원선 수리 공사를 설계함에 있어 일부 공정의 경우 제조업체 측에서 제시한 견적서만을 참고하여 설계함으로써 과다하게 설계·발주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한편 용진군 보건소에서는 선박수리 공사를 설계하면서 2006년에는 선체공사 공정중 선체 상·하가 금액 3,000천원, 갑판부분 청락(타기실 포함, 204㎡) 금액 300천원, 발전기 분해·건조수리(69KW) 1,800천원, 주기 충전모터 분해·수리 200천원 등으로 설계하였고,

2007년에는 선체 상·하가 3,500천원(2006년 대비 500천원 증액), 갑판부분 청락 1,500천원(2006년 대비 5배 증액), 발전기 분해·건조수리 1,440천원(360천원 감액), 주기 충전모터 분해·수리 300천원(100천원 증액)으로 설계하는 등 일부는 감액하였으나 일부는 5배 이상 증액하는 등 부당하게 설계하였는바,

비록 이러한 공정이 특수한 경우라서 물가정보지나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가격정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타 시·도나 기초 자치단체, 타 시·도 소재 선박수리업체 등으로부터 설계서나 견적을 받아 비교·검토하는 등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설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동 건과 관련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인천에 소재한 선박수리나 제조업체가 3 ~ 4개로 추정되는바, 업체간 담합 등을 통하여 금액을 과다하게 제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동 공정에 대한 관련 협회나 조달청 등에서 인증한 금액이 없으므로 과다 계상으로 감액이나 회수조치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됨

[처 분 요 구]

1. 용진군 재무과장은

○ 매년 당해연도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 용진군 보건소장은

○ 관공선 관리계획을 근거로 매년 병원선 관리·운영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 병원선 수리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을 관계법령을 일탈하여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낙찰자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은 물론, 입찰참가 자격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입찰참가 자격 적격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병원선 수리공사 설계(원가작성)시 물가정보, 시장조사, 타 시·도 사례, 타 시·도 소재 선박수리업체 등의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병원선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용진군 기획실장은

○ 관공선 수리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부당하게 제한한 前 보건행정담당 **지방보건주사 이○○**(現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지방행정주사 고○○**(現 관광문화과 소속)과 병원선 수리공사 설계심사를 부당하게 한 **병원선장 지방해양수산 5급 황○○**을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행정상 조치] 시정(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및 당해 제품폐기 처분 이후 회수· 폐기 등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식품위생법령, 식품안전관리지침(보건복지가족부 훈령) 등 규정에 의거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판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와 함께 당해 제품 폐기처분 명령을 하여야 하고, 당해 제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해한 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직접 회수 및 폐기하거나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로 하여금 전량 회수· 폐기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옹진군 종합감사 시에 부적합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부당하게 조치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2006년 및 2007년 부적합 식품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 1) ○○○청정 건강식품 : 백령면 ◆◆리 919, 나동

- 제품검사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치 초과]

* 관련제품 : ◆◆◆ 엑기스골드, 천연△△△ 엑기스골드

- 행정처분 :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당해제품 폐기

* 동 업체의 경우 2006년 및 2007년 계속해서 세균수 초과됨

- 2) ○○물산 : 백령면 △△2리 1493-2

- 제품검사결과 부적합[세균수 기준치 초과]
- * 관련제품 : ◆◆◆ 엑기스골드, 천연△△△ 엑기스골드
- 행정처분 :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당해제품 폐기

용진군에서는 위 2 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제품의 제조일자 등을 처분명령서에 표시하여야 업체에서 당해 제품을 확인하고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음에도 처분명령서에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을 누락시키고 처분하였고,

더욱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의 사무를 사무위임조례나 규칙에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백령면장에게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확인관리기록부(자체 임의서식)와 출장복명서를 처분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토록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주민생활지원과-18713호. 2007.10.24),

백령면에서 군에 제출한 이행여부 확인내역과 출장복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막연하게 당해 제품을 폐기하였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또한 폐기량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소각하는 사진만 2장 첨부되어 있는바(백령면-9262호. 2007.11.20),

향후 용진군에서는 여건상 백령도 등 도서지역에 건건이 출장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먼저 조례나 규칙 등으로 관련 사무를 면장에게 위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각 면에 위와 같이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할 경우에는 생산일지 및 거래일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파악한 후 재고량은 전량 폐기토록 조치함은 물론,

이미 판매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까지 당해 업체로 하여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수·폐기토록 함으로써 위해 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이 요구됩니다.

- * 등 건에 대해서는 2008년 보건환경연구원 종합감사 시에 확인서를 별도 징구하였으며, 관련자(지방보건주사 김○○)는 기 “혼계” 처분하였음

2. 영업장 면적 임의확장 영업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계속적으로 시정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함

식품위생법령이나 식품안전관리지침 등 규정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기타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일정 기한 내에 처분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6개월 이내에 위반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었는지 등을 재차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 우리밀칼국수(영흥면 선채리 소재)”, “◆◆회집(백령면 연화리 소재)”, “△△ 칼국수(백령면 진촌리 소재)” 등 일반음식점 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후 관련 면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는바,

먼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였어야 하고, 또한 관련 면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이행여부 외에도 위반행위(영업장 임의 확장)의 근절 또는 시정여부를 6개월 이내에 다시 확인토록 하거나 직접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는 등 식품위생영업자 행정처분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용진군 보건소장은

- 향후 부적합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등의 사무를 면에 위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장 면적의 임의 확장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 이후 해당 업체로 하여금 변경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분야

[일련번호 : 3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용진군(환경녹지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재활용선별장 기계설비 제조설치 준공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용진군재무회계규칙 제123조 규정에 의거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 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진군 환경녹지과에서는 공공 재활용선별장 기계설치 제조설치를 위해 2007.12.31 도급액 50,500천원(공사기간 2008.1.2 ~ 2008.4.21)에서 흥인터크(주)와 계약 체결하였나,

재활용선별기계 설치장소인 북도면 ○○리 산185번지에 재활용선별장 신축(258.18㎡)공사를 2008.3.9까지 완료하고, 동 건물 내에 재활용선별기계(스티로폼감용기 1대, 활성탄흡착탑 1대, 고압세척기1대, 종합압축기 1대, 캔압축기 1대)를 2008.4.21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동 선별장 신축공사시 무연분묘가 발견되어 2008.1.30 공사중지(2008.9.25 재 착공되어 2008.11월초 준공 예정) 됨에 따라 기간내에 재활용선별창고에 재활용선별기계를 설치할 수 없게 되었으나,

재활용선별기계 도급사로부터 열악한 재정상황 및 제작공장이 협소하여 제품을 신축공사 완료시까지 보관하기 어렵다고 호소하여 인근 창고에 보관 후 재활용선별장이 준공되면 이동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설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정하게 2008.4.21 준공처리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재활용선별장 준공후 재활용선별기계를 적정설치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환경녹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94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소홀

[위법부당내용]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구청장 위임)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옹진군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2006년부터 2008년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살펴본 결과,

옹진군 영흥면 ○○리 723-90외 4필지 신◆◆ 소유(연면적 195㎡)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167,020원, 영흥면 △△리 915-8번지 황□□ 소유(연면적 1,276.02㎡)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744,530원, 영흥면 ☆☆리 390-32번지 김○○ 소유(연면적 652.2㎡)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29,100원 등 총 3건 940천 원의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미부과한 940천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조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환경녹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을 제외하며, 이하 "누출검사대상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10년이 경과하는 때에는 6월 이내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부칙(제18910호, 2005.6.30)제3조 규정에 의거 동 규정의 시행 당시 설치한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누출검사대상시설은 2008년 6월 30일까지 누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옹진군 환경녹지과에서는 41개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백령면 ○○리 1027-1 ◆◆주유소에 대하여는 1993.9.16 설치되어 2008.6.30까지 누출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누출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동 시설에 대하여 누출검사를 받도록 관계법에 따라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미 실시

[위법부당내용]

하수도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옹진군 건설재난과에서는 영흥면 ○○리 1700-9번지 김◆◆ 소유 오수처리시설(50m³/일)이 2007.10.8 준공됨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8.2.36까지 방류수를 채수하여야 하고,

또한 영흥면 ◆◆리 1336-6번지 반□□ 소유의 오수처리시설(30m³/일)은 2008.4.16 준공됨(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등록한 제조제품 아님)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8.9.4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방류수수질검사를 미 실시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필히 확인토록 시정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교통분야

[일련번호 : 3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개발계획과·건설재난과·관광문화과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개선·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상업무 부적정

○ 도로 개설·확포장 사업 현황

(기간 : 2006.9.~2008.8.)

구분	계	군도	농어촌도로	비법정도로	비고
사업건수	49	34	4	11	

○ 토지 보상 현황

(2008.9월말 현재, 단위 : m²)

구분	계		보 상		미보상 (미불용지)		등기필		미등기		비 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4,106	1,194,619	3,183	1,007,096	923	187,523	2,808	875,419	375	131,677	
북도	709	146,494	587	125,630	122	20,864	545	112,664	42	12,966	
연평	176	77,033	101	69,061	75	7,972	101	69,061	0	0	
백령	939	297,864	656	221,736	283	76,128	521	183,207	135	38,529	
대청	185	109,354	109	83,198	76	26,156	109	83,198	0	0	
덕적	936	283,023	749	256,634	187	26,389	649	206,678	100	49,956	
자월	373	103,697	293	86,480	80	17,217	292	85,373	1	1,107	
영흥	788	177,154	688	164,357	100	12,797	591	135,238	97	29,119	

[위법부당내용]

1. 사업인정 절차 미이행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수용·사용·제한)하는 때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과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토지보상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등의 승인·인가·고시·결정 등에 의한 사업인정절차를 거쳐 협의 불가시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도로 사업등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인정 및 수용에 의한 방법으로 토지등을 취득한 사례가 전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사전보상의 원칙 위반

토지보상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웅진군에서는 ‘2003 ○○리 도로포장공사’ 외 48건의 도로확포장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손실보상비를 예산에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시설(공사)비 예산에 일괄 계상함으로써, 공사완료(준공) 후 시설비 잔액으로 손실보상을 시행하는 등 사전보상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총 923필지(187,523㎡)의 미불용지를 발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3. 손실보상후 소유권 미이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 조치함으로써 온전하게 재산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용진군에서는 375필지(131,677㎡)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이전치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를 불능케하였으며, 민원야기 및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향후 이중보상의 여지를 남긴 사실이 있습니다.

4. 보상물건 확정 부적정

토지보상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대상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전체면적 및 편입면적과 현실적인 이용상황/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작성일/그 밖에 토지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물건조서에는 물건이 있는 토지의 소재지 및 지번/물건의 종류·구조·규격 및 수량/물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작성일/그 밖에 물건에 관한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물건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과 편입면적을 기재하고 그 실측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상물건을 확정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①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해 작성된 용지도와 도시계획도에 의거 편입지번 확인 ②편입토지의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에 의거,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각각 확인 ③편입토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불법형질변경된 토지·도로 및 구거·개간지 등)을 조사하여, 현실이용상황대로 평가·보상하여야 할 토지는 현황측량에 의거 산출된 면적으로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지장물(건축물)의 경우에는 ①적법 건축물 여부 및 소재지 지번을 건축물대장에 의거 확인하고, 건물등기부등본에 의거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관계 확인 ②지장물도와 지장물조서를 바탕으로 현지 출장하여 물건(건물 등)의 종류·용도·구조·면적 등을 확인한 후, 실측평면도 작성 및 개·보수 현황 조사 ③거주자 현황(거주일자·거주인원·거주면적 등) 및 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20년 이내 도시계획사업 재편입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건물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06 군도8호선 재포장공사' 등 48건의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용역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을 공부조사·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는 등 보상물건 확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5. 현실이용상황대로의 미보상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 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의 평가)·제25조(미불용지의 평가)·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제27조(개반비의 평가 등) 규정에 의한 토지 평가를 위하여는 현실이용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는 바, 토지이용상황이 다른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측량에 의거 면적을 산출하여 보상액을 달리 결정하여야 함에도,

웅진군에서는 ‘○○6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48개 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현실이용상황이 사실상의 도로인 부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거쳐 1/3로 평가보상치 아니하고 공부상의 지목대로 평가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6. 가격시점 설정 부적정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제1항에 의하면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액은 계약체결 또는 수용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계약체결 당시의 가격으로 건별 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 하여도,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에 응할 수 있는 시기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웅진군에서는 ‘○○6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48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가격시점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치 아니하고 평가의뢰한 사실이 있습니다.

7. 감정평가서 검토 부적정

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

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6리 도로확포장공사’ 등 48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법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 후 제출된 감정평가서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이 없이 보상액을 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8. 감정평가수수료 낭비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한 후,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용진군에서는 ‘○○6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보상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1년이상 방치하다가 재평가함으로써 감정평가수수료 2,315,500원을 낭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9. 잔여지 매수절차 부적정

토지보상법 제74조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잔여지의 판단기준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및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잔여지가 잔여지 판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②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는 보상협의 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 이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청구되어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 후, 매수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2003 〇〇6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영흥면 〇〇리 1542-37(대)번지를 잔여지로 매수하면서 소유자의 매수청구 및 매수여부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과정(결재) 없이 잔여지를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10. 영농보상금 미지급

토지보상법 제48조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〇〇6리 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된 영흥면 〇〇리 1688-28(답)번지를 취득하면서 영농보상금 338,2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시행한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공익사업(도로, 영조물 등)을 시행하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사업인정 등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2.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 등을 예산에 별도 계상하여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후에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3. 미불용지 및 소유권 미이전 토지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될 시에는 엄중 문책하게 됨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정
4.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의 보상물건 확정단계는 적정한 보상 및 민원과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인식하여, 보상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정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절차를 확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5. 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처리되는, 각 개별법에 의한 인가·고시를 위해 용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 등의 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용역수행시 보상담당 직원을 용역감독자로 지정·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6. 보상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현실이용상황대로의 평가·보상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사를 통해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조서를 작성한 후, 현실이용상황대로 평가·보상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7. 가격시점은 감정평가 기간과 평가서 검토 및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통지 등의 기간을 참작하여 소유자 등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쳐 보상협의를 응할 수 있는 시점을 가격시점으로 정하여 평가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8.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제출된 감정평가서에 대하여는 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를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검토하고, 검토결과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

※ 검토항목 예시

《공 통》

- 평가의뢰 목록과의 일치 여부(지번·지목·지적/물건종류·수량·면적 등)
-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지 여부

《토 지》

-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용도지역·지구, 지목, 이용상황 등)
및 개별요인비교의 적정성(가로·접근·환경·획지·행정·기타 등)
☞ 용지도, 지장물도에 단가 및 표준지 표기하여 검토결과서에 첨부
- 비교표준지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중 기타요인비교가 1.5배 이상인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 공법상 제한 평가여부
- 현실이용상황 평가여부(도로, 구거, 하천, 무허가건축물 부지, 불법 형질변경 토지,
개간비 등)
- 미불용지 평가의 적정성 여부

《지장물》

- 평가방법 확인(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 규칙 제33조
- 구분평가 및 일괄평가 여부 ⇒ 규칙 제20조
- 이전비 또는 취득비 평가 여부 ⇒ 시행령 제75조
- 보수비 평가 여부 및 취득가격 초과 여부 ⇒ 규칙 제35조

《기 타》

- 보상선례 및 유사 평가대상물건과의 비교 등

9.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실질적인 보상협의를 가능한 때에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10. 잔여지는 보상협의 계약체결 또는 수용재결 이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로
부터 매수 청구를 받아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 후, 매수여부를 결정·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11.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영농보상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12. 손실보상업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이 다양
하고 복잡·다기하여 적정한 보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고도
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고,

또한,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을 신
설하여 운영함이 요구됩니다. ⇒ 권고

[일련번호 : 3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자동차 관련 특사경 업무 부적정

○ 특사경 업무 미결처리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위법부당내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5.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에서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법에 의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인과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된 자는 소관 직무의 범위내에서 범죄사실 수사 등을 통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고처분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 형사 처벌 대상인 ‘자동차무단방치 차량’ 및 ‘무보험 운행차량’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125건을 이첩 받았음에도 특사경 업무를 전혀 수행치 않아 48건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고, 77건은 방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미결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처리하시고, 향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분야

[일련번호 : 3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05,407,51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발전(◆◆화력) 주민세 등 과세누락

[위법부당내용]

○ 추징세액

(단위 : 원)

세 목	계	본 세	가산세	비 고
계	105,407,510	82,877,790	22,529,720	
주민세(법인세할)	95,769,390	75,232,040	20,537,350	
사업소세(재산할)	9,638,120	7,645,750	1,992,370	

가. 주민세(법인세할)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에 의하면 “ 「사업장」 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3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세부액 =

$$\text{법인세총액}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right) \div 2 \times \text{당해 시·군의 세율}$$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음.

○○발전(◆◆화력) ◆◆3호기의 경우 2007.11.15 시운전을 시작하여 동월에 9,216(MWh)의 전력을, 12월에는 311,286(MWh)의 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관련 건축물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건축물 면적에 산입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법인세할 주민세 95,769천 원을 옹진군청 재무과에서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에서 “법 제243조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기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사용면적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법 제244조, 같은법 제249조, 같은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내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인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발전(◆◆화력)의 경우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를 하면서 에너지파크 건축물을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과학관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였으나 ○○발전 에너지파크는 e-플라자(본관동), e-오디세이(전시실), 하모니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인에게 관람을 허용하고 관람시 예약을 하는 등 ○○발전의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하모니홀(공연홀)은 일반인에게 대여하여 일반인이 연말에 공연을 하는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과세대상이며,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화시키는 기계장치(생산시설)로서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용진군청 재무과에서는 9,638천원을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발전에 대한 주민세 및 사업소세 105,407천 원에 대한 누락세액을 추징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연찬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9,78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목변경 토지 취득세 등 과세누락

[위법부당내용]

○ 추정세액

(단위 : 원)

구 분	계	본 세	가산세	비 고
지목변경(50건)	59,780,390	44,757,450	15,022,940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이라 함은 건축공사 등과 병행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된 때를 취득의 시기로 봄.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2007년부터는 지목변경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의거 지목변경 비용으로 투입된 사실상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웅진군청 재무과에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건축 등 그 원인되는 공사가 완료되어 지목변경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윤석민외 49명에 대한 취득세 등 59,780천 원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59,780천 원에 대한 누락세액을 추징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9,444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발전(◆◆화력) 협력업체 주민세 등 과세누락

[위법부당내용]

○ 추징세액

(단위 : 원)

구 분	계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특별징수분)	사업소세 (재산할)
계	29,444,750	21,987,910	880,000	6,085,170	491,670
△△△△ 중공업	29,004,750	21,987,910	440,000	6,085,170	491,670
○○건설	220,000		220,000		
◆◆건설	220,000		220,000		

가. 주민세(법인세할)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72조 제7호에 의하면 “ 「사업장」 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3조 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할은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광역시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세부액 =

$$\text{법인세총액} \times \left(\frac{\text{당해 시·군내 종업원수}}{\text{법인의 총 종업원수}} + \frac{\text{당해 시·군내 건축물연면적}}{\text{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right) \div 2 \times \text{당해 시·군의 세율}$$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저유조·사일로·저장조·송유관·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그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규정하고 있음.

전남 영암군 삼호읍 ○○리 1700번지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공업이 용진군 영흥면 ◇◇리 산 168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할 주민세를 안분계산 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용진군청 재무과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 21,987천 원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에 의하면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5조 제1항에 의하면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인 : 사업장 소재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용진군청 재무과에서는 현대건설 외 2개 업체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 880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특별징수분 주민세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 하는 소득할 중 다음 각호의 소득세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제179조의3 제1항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웅진군 영흥면 ○○리 산 168번지 ○○○○중공업(주)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은 사업장 소재지인 웅진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특별징수분 주민세 6,085천 원에 대하여 웅진군청 재무과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 사업소세(재산할)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244조 제1호 및 제24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내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재산할 사업소세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인 사업주가 해당 사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재무과에서는 ○○○○중공업의 사업장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491천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발전 협력업체에 대하여 과세 누락된 지방세 29,444천 원(법인세할 주민세 21,987,910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880천 원, 특별징수분 주민세 6,085천 원, 재산할 사업소세 491천 원)을 추징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3,964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가설건축물 등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과세누락

[위법부당내용]

○ 추징세액

(단위 : 원)

구 분	계	본세	가산세	비고
계	23,946,560	18,163,770	5,782,790	
가설건축물	8,413,720	6,708,200	1,705,520	
건축물 사전입주 고발자	9,254,020	6,713,430	2,540,590	
신축 및 증축 건축물	2,552,480	1,949,340	603,140	
위법증축 건축물	2,026,970	1,477,880	549,090	
급배수시설 (지하수관정)	1,699,370	1,314,920	384,450	

가.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세 운영세칙107-2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 1년 초과」 판단의 기산점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상 존치기간의 시기(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가 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사례(행심제2004-370호, 2004.12.29)에서 존속기간의 기산점으로 부터 1년이 초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여 기존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였음.

따라서 용진군청 재무과에서는 존속기간의 기산점으로부터 1년이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소유자 김동현 외 5인에 대한 취득세 등 9건 8,413천 원에 대한 누락세액을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건축물 사전입주 고발자 취득세 등 과세누락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21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세에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진군청 재무과에서는 건축물 신축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전입주(사실상 취득일)하여 고발된 오만석 외 1인에 대한 취득세 등 9,254천 원과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 및 증축하여 사용승인(취득일)을 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환규 외 4인에 대한 취득세 등 2,552천 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증축한 김태호 외 2인에 대한 취득세 등 2,026천 원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급배수시설(지하수 관정)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누락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에서 “부동산”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같은법 제4호에서 “건축물”을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 급배수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호에서 “취득”의 개념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물건 소재지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 및 같은법 제121조에서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면,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본세에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웅진군청 재무과에서는 건축물(급배수시설)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김○○ 외 28인에 대한 취득세 등 1,699천 원에 대한 세액을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지 아니하여 과세 누락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8,413천 원, 사전입주 고발자에 대한 취득세 등 9,254천 원,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2,552천 원, 위법증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2,026천 원, 급배수시설(지하수관정)에 대한 취득세 등 1,699천 원을 추징초치 하시기 바랍니다.
2.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속기간 1년 경과시점부터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존속기간 1년 경과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자료를 면밀하게 대사하시기 바라며, 사전입주 고발자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인 입주일이 되기 때문에 건축부서의 사전입주 고발자 현황 등을 활용하여 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배수시설(지하수관정)과 신증축 건축물 및 위법증축 건축물의 경우 해당부서 자료를 면밀하게 대사하여 과세누락 되는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령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행정분야

[일련번호 : 4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건설업 등록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내 용

가. 건설업등록 신고처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면, 신고를 접수한 등록 관청은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건설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의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 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에서는 2007.12.20일 ○○건설(주)로부터 건설업등록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신청서류 중 사무실확보의 사실확인을 위해 백령면에 사무실(면적)확인을 의뢰한 결과 사무실 면적은 29.25㎡로 동일 소재지에 위치한 ◆◆건설(주)와 사무실을 분리사용한다고 하였으나 현장사진에서는 건물전면에 △△종합상사로 표시하여 건물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내부전경 또한 △△종합상사에서 구입하여 비치해 놓은 설비자재를 진열해 놓고 있어 ○○건설(주)와의 사무실 구분은 물론 ◆◆건설(주)의 독립된

사무실 확보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건설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무실 구비 요건에 어긋난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2008.1.25일에 화랑건설(주)에 대한 전문건설업 등록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주기적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 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적 신고”)를 건설업종별로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다.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기술인력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호에 따라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인천광역시 용진군 건설재난과에서는 주기적 신고를 처리할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건설업 관리지침”의 규정과 같이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하나, 2008.7.31일 □□건설(주)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위 업체에서 신고 첨부서류인 기술인력보유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3년동안 기술인력 보유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2008.8.23일에 주기적 신고처리 하였으며,

또한, 2008.7.31일 (주)○○건설로부터 주기적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위 업체에서 신고 첨부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구비하여 신고 접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2008.8.23일에 주기적 신고처리 하는 등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에서는 건설업 등록 및 주기적 신고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접합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신고처리하시어 부적격업체가 등록(신고)처리되는 사례가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법령위반 건설업체 통보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불법광고물 조치현황

구 분	합계	미통보	지연통보	비고
업체수	87건	76건	11건	

2.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 및 ◆◆대료 관리사무소 증축공사(2차분)”외 86개 업체가 위 규정에선 정한 기준에 초과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하거나 미통보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등록지 행정관청에 미통보하고 있어 법령위반업체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용진군 재무과에서는 건설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게 도급계약사항을 미통보 또는 지연통보한 건설업자를 등록관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개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옹진군 관내 광고물 현황

구분	합계	적법	불법			비고
			계	요건구비	요건불비	
합계	1,755	696	1,059	454	605	
○○면	22	22	0	0	0	
◆◆면	70	46	24	0	24	
△△면	597	226	371	181	190	
□□면	29	29	0	0	0	
☆☆면	76	76	0	0	0	
◎◎면	41	23	18	5	13	
◆◆면	920	274	646	268	378	

2. 내 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거나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개발계획과에서는 2008.7.2일 “실효성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을 위한 불법광고물 일제 자진신고기간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2008.6.1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처리하고,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은 자율정비비 지급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2009년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일반보상금으로 37,500천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율정비비 지급은 행정대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설치자가 자진하여 불법광고물을 철거 할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 현재 옹진군 관내 요건구비 광고물이 454건 중 자진신고 광고물은 전무하고, 요건불비 광고물 605건 중 자지정비 광고물은 2건에 그치고 있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의 2에 규정에 의거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7.10.1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에서 당초 사업지역을 선재대교~영흥대교 간 1.5km구간 160여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사업비 460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동 구간은 선(線)적인 요소로 특정지역을 정하여 면(面)적으로 정비하는 것보다 사업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2008.8.29일 영흥면에 의견제출을 요구한 후 다시 동 지역은 자율참여 호응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상지역을 다시 백령면으로 하여 2008.9.19일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지역의 결정이후 옥외광고물 게시 규제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개최, 지구지정 고시·공고, 용역수행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요구됨에도 감사일 현재 대상지 의견 수렴중에 있어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월 등 사업지연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됩니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 용진군 개발계획과에서는 현재 준치 중인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자율정비(양성화) 후 잔존하는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법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또한 사업추진의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정책결정 지연으로 예산이월 등 그 효과가 저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0,218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피서철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2007 피서철 수상안전요원 배치 현황

구분	용역기간	계약업체	계약금액	사업내용	비고
북도·연평·백령· 대청·영흥면	‘07.7.15 ~ 8.19	(사)대한○○ 구조협회	148,879천원	수상안전요원 39명	
덕적·자월면	“	(사)특수임무 ◆◆◆동지회	133,359천원	수상안전요원 35명	

2. 내 용

가.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분할발주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문화과에서는 옹진군내 북도면외 6개면에 대하여 피서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2007년도 피서철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을 발주하면서 동 용역내용은 ‘07.7.15일부터 같은해 8.19일까지 36일까지 북도면외 6개면 25개 해수욕장에 73명의 해상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용역사업으로 전년도까지는 7개면 전체를 과업대상으로 하여 발주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2007년도에는 “7개면 전체를 1개 용역업체가 관리하기가 어려우므로 광역지역으로 분리”한다 하여 총사업비 322백만원 상당을 북도·백령·대청·연평·연흥면 169백만원 상당과 덕적·자월면 153백만원 상당으로 구분하여 지리적 여건에도 불 부합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게 분할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8년도에는 동 예산 355백만원을 7개면에 재배정사업으로 시행

나. 선금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서 선금의 지급은 당해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되 지급대상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건설자재파동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공사 등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60일 이내도 가능)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한 후, 선금이 적법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2007년도 피서철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을 2007.7.13일에 (사)특수임무◆◆◆동지회와 133,359천원, 같은 날 (사)대한○○구조협회와 148,879천원에 계약체결한 후, 동 사업은 계약이행기간이 36일로 선금지급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2007.7.13일에 (사)특수임무◆◆◆동지회로부터 인건비 및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66,000천원의 선금지급을 접수한 후 2007.7.30일에 신청금액 전액을 선금지급하였으며, 2007.8.7일에 (사)대한○○구조협회로부터 장비구입비 및 숙박·식비의 명목으로 70,000천원의 선금지급을 접수한 후 2007.8.16일에 선금지급조건의 명시없이 신청금액 전액을 선금지급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선금지급조건에 위배되게 선금을 지급하였으며,

(사)대한○○구조협회의 경우에는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설계내역서에 수상안전장비는 웅진군에서 제공하는 장비와 그 외의 필요사용 장비는 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2007.7.13일에 제출한 착수계의 “해수욕장 장비 지원 목록”서 산소호흡기 11개, 레스큐 튜브 22, 구조용 로프 11, 구급함 11, 인공호흡 마스크 11, 잠수복 22, 스킨잠수 장비 11, 무전기 39개를 각각 지원한다고 하였음에도, 선금급 사용계획서에서 레스큐 튜브 20, 구급함 20, 산소호흡기 20, 구명로프 20, 무전기 40개 등을 구입하겠다는 내역으로 선금 지급을 신청하였다면 위 설계내역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사)대한○○구조협회에서 제출한 착수내역에도 위배된다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선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또한 선금사용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정산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부가가치세 부당 지급

(사)대한○○구조협회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면세대상 업체로 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도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만큼을 제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함에도

인천광역시 웅진군 재무과에서는 2007.7.13일에 (사)대한○○구조협회와 “2007년도 피서철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을 계약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계약체결함으로써 13,534천 원 상당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사)대한○○구조협회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08년도에도 재배정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평면외 3개면서 수의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사)대한○○구조협회와 계약체결하면서 2007년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계약체결 함으로써 16,684천 원 상당을 초과하여 지급함.

※ 2008 수상안전요원 배치용역 계약현황((사)대한○○구조협회)

구분	계약방법	계약금액	비고(부가세금액)
연평면	수의	18,298천원	1,663
대청면	입찰	34,602천원	3,145
자월면	입찰	82,457천원	7,496
영흥면	입찰	48,188천원	4,380

[처 분 요 구]

1.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에서는 향후 계약체결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위배되게 분할발주하거나, 선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2. (사)대한○○구조협회 및 각 면사무소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30,128천 원은 환수조치 하시고,
3. 동 사항을 각 면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및 부가가치세 환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분야

[일련번호 : 4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기획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미 수립

[위법부당내용]

지역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②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시의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친다.③기본계획에는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목표와 전략, 각 부문별 지역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사항, 추진체계에 관한사항,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동 등에 관한사항,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지역정보화 산업육성, 정보화 교육에 관한사항, 기타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나 1998년 조례 제정 이후 옹진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였고, 옹진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12일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함.

따라서, 용진군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법” 및 “용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1998년 11월 20일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용진군 기획실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기본법 제5조, 용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용진군 기획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군 홈페이지 운영 및 자료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인천광역시 용진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에 의하면 ①기획실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용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자료관리책임자의 책무 및 평가)①자료관리 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료관리책임자는 입력된 자료가 항상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실무담당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용진군 기획실에서는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사업을 2005년 12월에 준공하여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및 정보제공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기획실-8369(2007.11.30)호 및 기획실-8350 (2008. 8.27)호 등으로 수차례에 거쳐 최신자료로 관리하도록 해당실과에 통보하였으나, 홈페이지 재구축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2008년 9월 현재까지 붙임과 같이 어린이홈페이지 학습/게임 메뉴는 ○○전래동화와 링크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2007.1.12일부터 서비스가 중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메뉴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는 오류가 있

고,

여성홈페이지는 주민생활지원과 △△△△팀에 2008.7.21일에 영유아교재지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며, 청소년 홈페이지에는 자료를 방치하여 2007년도의 사업내용이 게시되어 자료업데이트가 필요하며, 어르신 홈페이지에는 자료실 내용이 3년간 한건의 게시물도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을 하고 있음

또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각 면사무소의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알뜰장터 메뉴는 자료가 없거나 2006년이후 자료 갱신이 전혀 없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처 분 요 구]

1.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주민들의 정보 수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석을 통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게시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4,

[제 목] 개인용 컴퓨터 보안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분류된 비밀문서는 동 규정 제18조에 따라 도난·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38조(비밀자료 등의 전자적관리)③비밀자료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계속 보관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하에 저장할 보조기억매체를 별도로 지정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한법률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등) 및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23조(PC등 보안관리)에 의거 개인용 컴퓨터를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에 근무하는 양○○은 정기분 면허세 허가 내역서 등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붙임과 같이 개인용 컴퓨터에

무단 방치하였으며, 재무과에 근무하는 이○○은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등 개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자료를 붙임과 같이 개인용 컴퓨터 폴더를 공유하였고, 개발계획과에 근무하는 유○○은 유가증권 수급부 등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붙임과 같이 개인용 컴퓨터에 무단 방치하였고, 건설재난과에 근무하는 권○○은 재산조회 대상자 명단 등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개인용 컴퓨터에 무단 방치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조작하고 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1. 정보통신부 고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단말기(개인용컴퓨터) 취급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개인용컴퓨터에 대하여 비인가자가 단말기를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열람, 출력, 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10분 이상 단말기의 작업중단시 화면보호조치를 설정하기 바람,
2. 부득이 자료(파일, 디렉토리) 공유시 비밀번호 부여조치를 하여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일련번호 : 5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인터넷쇼핑몰 옹진장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의 원칙), 동법 시행령 제53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동법 시행령 제56조(정보화시스템의 확산보급) 및 “자치단체 S/W 개발관련 중복개발방지 및 공동활용지침(행정자치부, 2006. 12. 11)”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사업(S/W)을 개발 또는 구매를 하는 행위의 중복투자로 인한 인적·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조정기관(제1,2,3차)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3항 및 회계예규 제20조(검사), 21조(인수)와 회계예규(협상에의한계약 체결기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등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에서는 인터넷쇼핑몰 “옹진장터”를 구축하면서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절차 없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옹진장터 운영용역을 2007.11.12일부터 2008.12.31일까지 계약체결하고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07년도 2개월(07.11~12월)분 1회 기성금을 2008. 1. 10일에 지출하였고, 2007년도 예산으로 2008년도 2월까지 2개월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분을 2008.2.22일에 일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용역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용역비를 선 지급하여 회계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웅진장터 시스템 구축과 연계한 “웅진장터”운영 용역시 입점대상 업체와 회의 (2008.1.29) 개최를 통하여 카드수수료 문제와 배송문제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하나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못한채 운영을 강행한 결과 판매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이 부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1. 웅진군에서는 향후, 용역사업 추진시 중복개발 방지를위한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하시고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도입시방서)를 기준으로 사업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성과물의 품질 관리를 위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2. 회계절차를 준수하여 용역사업을 철저히 수행하시고 인터넷 쇼핑몰 웅진 장터가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후 직원연찬을 실시 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보건소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2

[제 목]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사용방법의 개선 등의 원활한 프로그램운동을 위한 소프트웨어 용역유지보수의 대가는 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용역유지보수대가 산정)에 의거 유지보수 단가를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옹진군 보건소에서는 보건정보시스템을 2003.8.8일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개발(구축)비 S/W는 10 ~15% 이내로 유지보수비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H/W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 이내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7년도에는 2007.1.15일부터 2008.1.14 까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유지보수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업체의 견적에 의거 임의로 산정 하였고, 회계년도 구분에 따라 2007년도 유지보수는 2007년도 예산으로 2008년도 유지보수비는 2008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여야 하나 2007.12.15 ~ 2008.1.14일까지 유지보수비 602,910원을 2008년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2008년도 유지보수는 2008.1.1부터 12.31까지 2008.1.22일에 소프트웨어사업대
가의 기준이 아닌 업체의 견적에 의거 8,4000천원 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1분기
(1,2,3월분) 유지보수비를 지출하면서 2008.1.1~ 1.14일까지는 기 지출하였으나
301,450원을 중복하여 지출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1. 용진군 보건소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은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내역과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2. 2008년도 유지보수비 지출금액중 이중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유지보수 기간중 예방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지적·토지관리분야

[일련번호 : 5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도로 준공토지 토지이동 신청 소홀

[위법부당내용]

○ 도로준공 현황

(단위 : 건)

사업명	사업기간	편입 필지수	토지이동 신청일자	처리 결과	비고
06군도12호선 확포장공사	06.09.12 ~07.05.21	28	-	-	
07내3리-내7리간 도로공사	07.08.20 ~08.02.15	22	-	-	
07бет개선 확포장공사	07.06.29 ~07.11.23	8	-	-	

공공사업 등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이 된 토지의 그 사업시행자는 「지적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도로, 하천, 제방 등이 연접되어 합병해야 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합병신청토록 하여 공공용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우리 시 감사에서 2006.9.1~2008.8.31까지 용진군의 도로준공 현황을 살펴보면 위 현황과 같이 3개 사업 모두에 대해 사업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도로 등 실지 현황과 지적공부의 지목이 다르게 관리되고 있음.

[처 분 요 구]

이번 시 감사에서 지적한 도로준공 토지를 즉시 지목변경 및 합병 정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도로 등의 사업이 준공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및 합병 등을 신청하여 도로 등 공공용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 등이 일치하도록 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 5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319,445천 원 추징

[신분상 조치]

[제 목]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위법부당내용]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미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미부과 건수	납부대상자	부과 예정금액	비고
계	7		319,445	
명의신탁	4	유○○외 3	15,121	
장기미등기	3	김○○외 2	304,324	

※ [별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내역” : 개인정보 비공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후 이를 명의신탁하거나 장기간 미등기 한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 이라 함)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함.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명의 신탁자 및 미등기권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이번 우리 시 감사에서 2006.9.1~2008.8.31까지 용진군의 지방세 납세의무자로부터 등록세, 취득세 등 자진 신고시 제출받은 법원의 판결문과 검인을 받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별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내역”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7건에 대하여 과징금 319,446천 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별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내역”에서 지적한 7건에 대하여는 실체적 권리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판결문 등에 대한 부동산 검인자료, 과세부서의 납세 자료 등을 제출 받은 즉시 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 5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토지분할 등 처리결과 통지 소홀

[위법부당내용]

○ 건축물부지 토지분할·합병 현황

(단위 : 건)

구 분	처리건수	건축물부서 통보건수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일치여부		비고
			일치	불일치	
계	88	18	44	44	
토지분할	36	-	12	24	
토지합병	52	18	32	20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 합병은 건축물대장은 물론 건축물등기 등의 표시도 바뀔 수 있어 신청인의 재산권과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지적부서에서는 건축물 관리부서에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의 관련 지번을 직권으로 정리하게 하거나 정리 할 수 없는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함을 알려야 함.

관련 법령으로 살펴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합병이 있을 경우 「건축

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 13조에 따라 민원인은 건축물대장현황도 등을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규칙」 제20조로는 단순히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 지적부서의 통보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이 있는 모든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을 때 지적부서에서는 즉시 건축물 관리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직권정리가 가능한 부분은 행정 내부적으로 정리토록 하고 「건축물대장규칙」 제13조의 경우와 같이 변경절차 등을 필요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것임.

그런데 이번 우리 시 감사에서 2006.9.1~2008.8.31까지 용진군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합병서류를 검토한 결과 토지분할 36건 모두와 토지합병 52건중 34건을 건축물관리부서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서 토지분할 36건중 24건이, 토지합병 52건중 20건이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실제 토지의 지번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처 분 요 구]

토지의 분할, 합병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다른 44건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정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을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그 즉시 통지하고 신청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 신청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일련번호 : 5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개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KLIS 편집·연속지적도 구축 시급

[위법부당내용]

○ KLIS 업무추진 현황

구 분	KLIS 업무추진	비고
재 무 과	- KLIS 서버 관리 - KLIS 사용자 관리 - 지적, 공시지가, 부동산중개업 등	
개발계획과	- 도시계획관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하 “KLIS”라 한다)은 「행정자치부의 “필지중심토지정보 시스템(PBLIS)”과 건설교통부의 “토지종합전산망(LMIS)”를 보완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토지대장의 문자(속성)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2000)에 따라 구축되는 국가 지리정보시스템으로 국가적(지역적)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립하고 토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시민에게도 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임.

이 시스템에서는 「지적도, 편집·연속지적도, 지형도 및 80여개 법률에 의한 170여개의 용도지역·지구도등에 의한 공간자료와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발 부담금 및 중개업 등 속성정보를 통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행정 내부적으로 지적·도시계획 등 민원발급이 손쉽게 가능해지고 각종 도시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게 됨은 물론 2007.3부터 도시계획의 인터넷열람 등이 가능해지는 등 그 성과가 날로 커지고 있음.

이번 시 감사에서 2006.1부터 용진군의 KLIS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측량, 지적민원, 중개업관리, 공시지가분야 등 단위시스템에 한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편집·연속지적도의 변동자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KLIS 전산발급이 2008년도 기준 66%에 불과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지구지정을 위한 도면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등 당초 KLIS를 통합·연계시스템으로 구축·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어긋나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용진군에서는 금년도 개발계획과 본예산에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예산(편집·연속지적도 구축 포함) 270백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시점으로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용진군 전역의 토지정보가 KLIS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용진군의 이러한 당면 현안과제를 협의하고자 이번 감사기간 중 2008.9.23 (16:00,개발계획과) 재무과장, 개발계획과장, 담당팀장 및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의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용진군의 KLIS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서간 양해를 다음과 같이 함.

- 용진군의 2008년도 관리지역 세분화 사업(편집·연속지적도 구축 포함)은 조속히 시행하여야 함.

- 이 사업시행에 따른 편집·연속지적도 등의 검수는 재무과, 개발계획과가 공동으로 검수토록 함
- 이 사업완료이후 KLIS의 상시운용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KLIS의 도시계획의 전산관리분야 및 민원발급분야는 지적담당부서에서 관장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높다고 봄.
- 이러한 사항은 양 부서간에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고 부서간 업무조정 (조직개편)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함.

[처 분 요 구]

재무과, 개발계획과 간 두 부서에서 양해 한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용진군 KLIS가 하루빨리 정상화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해양 · 수산분야

[일련번호 : 56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어업면허 어장 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 어업면허 처분현황

구 분 어업별	2006년도 (12월말 기준)		2007년도 (12월말 기준)		비 고
	건 수	면 적(ha)	건 수	면 적(ha)	
총 계	261	2,571.445	274	2,769.445	
마을어업	85	1,094.17	98	1,256.17	현지확인 미 실시
양식어업	176	1,477.275	176	1,513.275	“

○ 신규 면허어장 어업개시일 미이행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 유어장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1. 어업권 관리 소홀

수산업법 제75조에 의하면 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육량 또는 판매실적을 당해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 보고의 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고,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을 거친 후 별지41호[어업의 종류별 어업권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나

용진군에서는 어장의 자원조사 및 보고시기를 어업권 자에게 매년 2월 3일 까지 보고 하도록 통보 하여 2007년 총261건, 2008년 총274건을 보고 받았으나 2008.9.22 감사일 현재까지 현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업권 관리 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기재하지 않아 어업면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신규 면허어장 어업 개시일 미이행

수산업법 제33조 1항에 의하면 어업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축제식양식어업의 경우, 천재 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종묘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제33조 2항에 의거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 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 면허어업의 개시기한을 위반할 때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경고, 3차 위반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진군에서는 2007.11.6부터 2008.6.27일 까지 신규면허 어장 9건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어업개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어장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유어장의 안전사고 예방관리 부적정

수산업법 제57조의 규정에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정치성구획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수역의 일정구역에 대해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 받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그 밖의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웅진군에서는 2005.6.3 지정한 유어장에 대하여 2008.6.16일 1회 만 확인하였을 뿐 2006년 및 2007년도에는 안전설비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위 1항과 관련 어업권자가 보고한 어장자원조사서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쳐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어업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위 2항과 관련 어업면허 어장에 대하여 어업개시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위 3항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유어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확인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선박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선에 어업허가처분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 허가신청 기간 만료 후 어업허가처분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1. 선박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선에 어업허가 처분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6조 제1항(어업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업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에는 어업허가 신청서에 선박검사증서 사본(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5톤 미만의 무동력선 제외)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선박검사증서 등 미소지 항해금지)에는 효력이 정지된 선박검사 증서 등을 비치한 선박은 항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옹진군에서는 어업허가 처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로활동에 임할 수 있는지 선박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 없이 선박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2008.4.20까지) 어선에 어업허가를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허가신청 기간 만료 후 어업허가처분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규칙 제7조(어업허가신청 시기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한 행정관청은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통지 하여야 하고,

동 규칙 제12조(어업허가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어업허가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신청 시기(유효기간 만료일 3일전)이후에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태풍 등에 의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진군에서는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또한 어업허가 신청 시기 이후에 정수가 있는 어업허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어업허가를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통보를 철저히 이행 하시고 정수관리 대상 어업허가 처분시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범칙어선 행정처분 사항 미통보

[위법부당내용]

○ 범칙어선 행정처분 미통보 현황

※ 개인정보 비공개

수산업 경영인 선정 및 관리요령(해양수산부 훈령 470호) 제8조에 자치단체장은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연도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 (어업정지를 가름하는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 포함) 및 동요령 제3항과 관련하여 수산업경영인의 어업면허(허가·신고)신고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사무소(인천수산관리사무소)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옹진군에서는 수산업 경영인(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에 대하여 범칙어선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2006.9.1부터 감사일 현재(2008.9.16)까지 동 처분사항을 수산업 경영인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사무소(인천수산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토록 하였습니다.

[처 분 요 구]

1. 수산업 경영인에 대한 범칙어선 행정처분 사항을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산종묘 매입 · 방류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수산종묘 매입 · 방류사업 현황

방류품종	종묘규격	사 업 량 (마)	사업비 (백만원)	방류해역	방 류 일
전 복	각장 4cm	176,018	150 (국비70% 시비30%)	백령면 고봉포, 남포리 지선	'07.12.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양수산 사업실시규정 제4조에 의거 확정된 매년도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시행지침에 방류품종의 작황부진, 질병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가 불가능 하거나, 수산자원 조성, 생태계 보전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한적으로 방류 품종, 크기, 시기(전복 방류시기 4~6월, 10~11월)등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옹진군에서는 적수온에 적응하여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시기를 경과하여 수산과학원장과 협의 없이 '07. 12. 6일 옹진군 백령면 고봉포 및 남포리 지선 어장에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176,018 마리를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류시기 등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국립 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762천 원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활어집하장 공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현황

사 업 명	공사기간	사 업 자	계상안전 관 리 비	감사지적내용	
				내 용	감 액
○○ 활어 집하장 신축(전기공사)	'08.04.24 ~ 09.01	◆◆◆◆	762천원	안전관리 용도 로 사용하지 않음	762천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사업장 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사용기준 및 항목별 효율, 공사 진척도에 따라 사용, 지출 되어야 하나

옹진군에서 시행한 ○○도 활어집하장 신축사업 전기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762천원으로서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실제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체에서 제출한 준공내역서 대로 준공금 전액을 집행함으로써 762천원 상당 사업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 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고 안전관리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762천 원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어촌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

사 업 년 도	면 별	어촌계별	사 업 명	시설위치	단 위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합 계					16건	3,350,000
2005년	북 도	☆☆	◇◇◇◇차량 구입 및 제작	장 봉	식	1(3ton)	51,250
			◇◇가공시설	장 봉	동/층/㎡	1/1/256	400,000
			◇◇개발	장 봉	식	1	55,000
	영 흥	★★	◇◇ 진입도로	삼박골	B×L(m)	3.0×150	200,000
2006년	공 통	◎◎종합개발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영흥,북도	식	1	103,750
	북 도	○○	◇◇◇◇ 연장	야달항(외)	B×L(m)	6.0×100	435,000
			◇◇◇◇ 연장	대빈창항	B×L(m)	6.0×50	242,000
			◇◇◇◇ 신설	야 달 항	B×L(m)/㎡	10×50/500	225,000
			◇◇◇◇진입도로	야 달 항	B×L(m)	5.0×600	295,000
			◇◇ 진입도로	옹 암	B×L(m)	3.0×250	105,000
		●●	◇◇ 진입도로	신 시	B×L(m)	3.0×700	251,000
	영 흥	★★	◇◇ 진입도로	측 도	B×L(m)	3.0×450	447,000
		○○	◇◇ 진입도로	동신수산앞	B×L(m)	3.0×270	112,000
		◎◎	◇◇ 진입도로	용 담	B×L(m)	3.0×500	143,000
		☆☆	◇◇어장시설	영 암	식	1	255,000
			◇◇어장기본계획 용역	영 암	식	1	30,000

해양수산 사업실시규정 제4조에 의거 확정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어촌종합개발 사업) 에서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복지 사업의 시설물 또는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시 까지로 하되 최소기한은 5년으로 하고, 이외의 생산기반시설물 등의 관리기간은 해양수산 사업실시규정에 의하며 세부단위사업 완공 후 매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 운영 관리시 필요한 경영지도,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동 규정 제43조 제3항에 의거 정확히 기록유지 하여야 하나

옹진군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산지가공 시설 등 16건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기록유지 하여 해양수산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전혀 실태점검을 하지 않는 등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 건설분야

[일련번호 : 6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9,900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군도 6호선 도로건설 및 ◇◇리 도로포장공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책임감리원)은 사업추진 시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 설계도서가 현장여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하고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기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시 흙막기 물량을 산출하면서 공사구간에 대한 지반조사 없이 토사 12,495m³, 리핑암 26,307m³, 발파암 9,972m³를 내역에 반영하여 m³당 순공사비 778원(토사), 1,121원(리핑), 4,457원(발파)에 2008년 7월 공사를 계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9월 현재 일부 발파암 구간에 대한 흙막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지질조건이 설계와 달라 리핑작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구, 맹암거, 횡배수관 등 배수공에 대하여 터파기, 구조물 시공 후 되메우기에 대하여 되메우기 심도, 작업공간 등 시공여건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배수공 되메우기 전체수량 6,048m³에 대하여 램머다짐을 반영하여 도급액 기준 적정공사비 보다 29,900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암검측 없이 시행하는 토공사에 대하여는 암검측을 실시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2. 배수공에 계상된 금액(29,900천 원)에 대하여도 설계변경 감액 조치 바라며,
3.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군도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단위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 구역을 결정하고, 설계도서, 자금계획, 사업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구역 결정 시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 건설과에서는 2003년도 시로부터 승인받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관리중이나,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한 2007년 11월 군도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등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옹진군의 군도정비사업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시행한 군도사업 33건 중 군도6호선 도로개설 공사 외 14건은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두호안 도로개설공사 외 9건은 도로구역결정고시 이전에 공사착공하고 이후에 고시하는 등 절차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용진군에서는 용역 등 방안을 강구하여 도로법에 충족되고, 향후 군도의 개설 및 정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재정비) 하시기 바람
2. 군도사업 추진 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선행하고, 도로구역결정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농어촌도로사업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에 대한 장기 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거 매5년마다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정비계획에 의거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의 노선지정 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옹진군 건설과에서는 2005년도 시로부터 승인받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동 기본계획에 의거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중이나, 2006년에서 2008년에 시행한 공사 4건 중 △△리 도로포장 공사 외 2건의 경우

도로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농어촌도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리 도로포장공사의 2건은 도로노선지정을 하였으나, 도로사업계획 수립을 하여 인천시의 승인을 득하지도 않았고, ◆◆◆도로포장공사는 도로노선지정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사업시행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용진군에서는 용역 등 방안을 강구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충족되고, 향후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정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도로정비계획을 수립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2. 농어촌도로사업 추진 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승인 및 도로노선 지정공고를 선행하고, 노선지정 공고 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의 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사업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경제과

[행정상 조치] 주의(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지방관리방조제(○○지구) 개보수공사 시공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가 현장조건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수행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변경에 의거 설계서변경 및 공정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옹진군에서는 시설이 노후되고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태풍 및 해일발생 시 재해가 우려되는 덕적면 ○○리 일원 서포방조제를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방관리방조제(○○지구)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배수갑문 1식을 설치하고, 물량장, 수로방파제 및 어민도로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2006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고, 동 설계에 의거 2007년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1. 규격미달 피복석 사용

본 공사의 실시설계용역 시 파랑으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피복석 규모를 검토함에 있어 방조제의 설계파고 등 실험 테이타가 없어 기존 피복석 규모를 분석한 결과 보다 안정적인 단면확보를 위해 0.5m³급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피복석의 규모는 파랑 등으로 인한 피복석의 이탈 등 구조물의 파손방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규격미달의 피복석을 사용할 경우 파랑으로 인한 구조물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감독공무원은 사급자재 검수 시 피복석의 규모를 확인하여, 0.5m³급의 피복석이 반입되도록 하여야하며, 실제 시공에 있어서도 0.5m³급의 피복석으로 구조물 등이 시공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사 시행시 사급자재 검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규격미달 (0.03~0.5m³급 이하)의 피복석이 반입되었으며, 실제 시공시 규격미달 피복석이 사용된다면 공사 중지 후 규격미달 피복석을 반출하고 적정한 규격의 피복석을 구입하여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로방파제 등이 규격미달 피복석으로 시공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피복석 시공 시 피복석간의 공급으로 파도가 흡수 된 후 쇄파현상으로 파압을 경감시키도록 피복석 고르기를 하여야 함에도, 피복석간 공극에 콘크리트 채움을 하는 등 부적합하게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콘크리트 비빔 및 타설 시공관리 부적정

본 공사는 레미콘을 공급하기 어려운 섬지역으로서 공사에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감독은 지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비빔이 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골재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사의 준공사진 확인결과 설계서에 의한 기계비빔(믹서기)을 하지 않고 사각통에 시멘트, 골재 등 재료를 넣은 후 백호우로 비빔을 하였으며, 품질관리계획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수문구조물 곳곳에서 골재분리현상이 발견된 사실이 있습니다.

3. 사토관리 부적정

본 공사는 최초 발주 시 유수지에서 6,400m³을 준설하여 제방도로공사용으로 사용토록 설계하였고, 2007년 7월 주민건의에 의거 21,924m³을 추가 준설하여 사토(운반거리 1.2km)토록 설계변경 됨으로써, 준설에 72,982천원 및 사토처리에 48,627천원의 순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감독공무원은 준설량 확인을 위해 원지반 측량을 하고 준설이 완료된 후 준공지반을 측량하는 등 준설량을 정확히 정산하여야 하며, 또한 사토처리에 있어서는 적정한 사토장을 지정하고, 사토장의 원지반 측량을 실시하고, 사토 완료 후 사토량을 측량하는 등 사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사는 준설완료 후 준공지반에 대한 측량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준설토(21,924m³)를 덕적면 ○○리 141-2번지 일원 외 3개소에 사토처리 하면서, 사토장의 원지반 측량 및 사토완료 후 확인 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준설량 및 사토량의 확인이 불가능하게 공사감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어장진입도로 시행 부적정

본 공사의 어장진입도로(길이 43m, 폭 4m)는 어장 진입로의 끝단이 공유수면의 원지반과 동일 높이로 설치되어 어장진입이 원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결과 설계상 어장진입 끝단이 설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어장진입이 어려워지자 시공사로 하여금 설계변경 없이 추가시공(길이 7m)을 하도록 하였으나, 추가시공부분의 피복석 이탈 및 콘크리트 포장면 균열 등이 발생하는 등 조잡시공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규격미달 피복석 사용과 관련하여 설계사 및 시공사와 협의하여 구조계산 등을 통해 피복석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바라며, 피복석간의 채움콘트리트

또한 제거하시고, 향후 피복석으로 시공하는 공사는 사급자재검수 및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2. 수문구조물의 골재분리현상은 보수조치하고, 향후 공사시행 시 콘크리트 비빔, 타설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3. 향후 시행하는 공사의 사토관리는 적정한 사토장을 지정하고, 사토량을 검측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어장 진입도로 공사와 같이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정한 설계변경 등을 통해 조잡시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개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허가현황

가. 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나. 위 치 : 옹진군 덕적면 ○○리 710-4, 710-5

다. 성 명 : 이○○

라. 면 적 : 496m²

마. 지 목 : 전

바. 허가용도 : 위험물저장소, 창고, 2종근생(사무실)

사. 허 가 일 : 2008. 05. 07

사. 용도지역 : 관리지역

□ 위법부당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시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하며,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이하 연접개발이라 칭함)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않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그러나 용진군에서는 덕적면 ○○리 710-4, 710-5번지상의 관리지역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위 요건에 의한 연접개발에 대한 검토없이 행위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용진군 실정에 맞는 연접개발의 적용기준을 만들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개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1

[제 목] ○○리운동장 정비공사 시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가 현장조건과 일치여부등을 확인하여 공사수행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변경에 의거 설계서변경 및 공정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개발계획과에서는 ○○리 운동장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축구장 및 다목적구장을 만들면서 축구골대 및 농구골대를 설치하였고, 이에 대한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1조(골대 2개)의 단가를 2개로 반영하여 과다 설계하였으며, 사토운반에 있어 사토장을 지정하고, 현지지반 측량 후 사토완료 후 확정측량을 하는 등 사토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사토 시 운반거리를 300m로 계상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사토운반거리가 150m 내외로서 설계변경 및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산없이 준공 리함으로써 4,808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2,469천 원

[신분상 조치]

[제 목] ◇◇◇항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가 현장조건과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사수행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변경에 의거 설계서변경 및 공정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항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실시설계시 방과제 상부에 타설하는 상치콘크리트 수량을 적정수량 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콘트리트 타설비, 시멘트 등 자재운반비 및 관급자재비 2,469천 원을 과다하게 반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에 대하는 설계변경 감액 조치 바라며,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1

[제 목] ◇◇리 어장진입도로 설계변경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공사감독업무 담당공무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가 현장조건과 일치여부등을 확인하여 공사수행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변경에 의거 설계서변경 및 공정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옹진군 해양수산과에서는 2007년 5월 ◇◇리 어장진입도로 시설공사 당초 실시설계 시 보조기층 수량이 과다 계상된 것을 설계 변경을 시행하면서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보조기층 수량을 적정수량 864m³보다 141m³가 많은 1,005m³를 내역에 반영하여 이에 대한 보조기층 재료, 운반, 부설비 6,666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2007년 7월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항 TTP 시설공사 실시설계 및 공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진두항 TTP 시설공사의 목적은 영흥면 ☆☆리에 위치한 □□항으로 항내파도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파제 등의 시설이 전무하여 태풍 및 파랑으로부터 항내에 정박중인 선박과 항내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파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총 연장 150m 중 1단계로 34.6m를 설치 완료하였고, 2단계 40m를 2009년에 시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르면 방파제의 마루높이는 설계조위에 안정성 검토를 위한 설계 유의파고($H1/3$)의 0.6배 이상의 적절한 높이를 표준으로 하고, 배후박지에 정박하는 선박의 소형여부, 고파랑 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조위상 $0.6H1/3$ 보다 더 높게 마루높이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업의 마루높이는 약최고고조위 $DL(+)$ 8.48m에 $0.6H1/3$ 인 1.44m를 더한 9.92m 이상으로 계획하였어야 하나, 실시설계에 마루높이를 약최고고조위 $DL(+)$ 8.48m에 여유고 0.02m를 더한 8.5m로 산정한 후, TTP 거치 효율성을 이유로 마루높이를 8.0m로 결정하여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흥면으로부터 방파제 시설이 만조시 해수면에 잠기게 되어 태풍

및 강풍등으로 발생한 해일, 파도 등에 의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마루높이를 만수위 이상으로 보강하도록 공사준공의견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1단계로 설치된 TTP는 방파제로서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맞는 마루높이로 재산정하여 2단계 공사시행 시 보강하고
2.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 영선분야

[일련번호 : 7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개발계획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경징계 2명, 훈계 3명

[제 목]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행 부적정

1. 용역현황

- 용역명 : 영흥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 도급자 : (주)◆◆종합기술공사 대표 문 ○○ 외 1인
- 계약금액 : 878백만 원
- 계약일자 : 2005. 11. 25
- 준공일자 : 2008. 02. 12

2. 관리지역세분화 추진현황

- 2004. 04. 19 :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화 용역계약 체결
- 2006. 02. 24 :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준공
- 2006. 12. 31 :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1~3차)
- 2007. 03. 26 : 군의회 의견청취
- 2007. 07. 03 : 군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7. 08. 17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요청(옹진군→시 도시계획과)
- 2007. 09. 05 : 관리지역세분 관련 보완요구(시→옹진군)
- 2007. 10. 04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계약 체결(보완서류 용역)
- 2007. 12. 24 : 관리지역세분 보완자료 제출

- 2008. 02. 21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용역준공
- 2008. 03. 28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완료(예방안전과)
- 2008. 05. 09 :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관련 보완용역 계약체결
- 2008. 07. 16 : 환경성검토협의 완료(한강유역환경청)
- 2008. 09. 16 : 산지협의 완료(산림청)
- 2008. 09현재 : 농지협의 진행중(농림수산식품부)
- 향후추진계획 : 주민 재열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결정고시

3.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 2005. 10. 05 : 용역수행업체 선정계획 수립
- 2005. 10. 06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 2005. 11. 01 : 기술용역 발주의뢰(건설과→재무과)
- 2005. 11. 25 : 용역계약 체결
 - 용역금액 : 1,547,010천원(2005. 12. 1 ~ 2007. 5. 24)
- 2006. 07. 12 :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보고(◆◆종합기술공사→웅진군)
 -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므로 계획관리 지역의 범위 및 경계의 결정시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중지요청
- 2007. 04. 19 : 설계변경 시행(1차)
 - 지구단위계획수립면적 축소(11km²→0.29km²), 측량면적 증가(11km²→22.25km²),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53.4km) 과업추가 등
- 2007. 08. 27 : 현안사항 및 문제점 보고
- 2007. 09. 1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회의개최
- 2007. 10. 26 : 용역 추진사항 검토보고
- 2007. 12. 21 : 설계변경 시행(2차)
 - 지구단위계획수립,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 용역제외
- 2007. 12. 27 : 용역기간 연장(2008.2.12까지 42일 연장)
- 2008. 02. 12 : 용역준공

[위법부당내용]

1.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발주시기 부적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웅진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웅진군 7개면의 관리지역(A=153km²) 전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 후 토지적성평가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세분화 용역을 2004.4.19.부터 2006.2.26.까지 시행하여 2007.8.17.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시 도시계획과에 요청하였으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서류 누락으로 보완을 요구받고 2007.10.4.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8.9.26. 감사일 현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환경성 검토 및 산지전용에 대하여는 관련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아직도 협의가 안 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만 가능함으로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 한 후 계획관리지역의 범위 및 경계에 대한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데도,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2005.10.5. 『영흥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업체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2008.2.12. 본 용역은 준공처리 되었으나 당초 주요과업 내용인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은 제외되고 측량면적 증가($11\text{km}^2 \rightarrow 22.25\text{km}^2$)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등으로 설계변경 되어 향후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등 용역발주시기를 관계법령에 부적합하게 시행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용역업체의 문제점 보고에 대한 해결방안 미강구

『영흥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업체인 (주)◆◆종합기술공사 대표 문 ○○이 2006.7.12. 웅진군에 제출한 공정보고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의하면,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영흥면 지역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은 5개지구 2.147km^2 로 승인되어 관리지역세분 용역결과 계획관리지역 면적 15km^2 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지정해야 하나 용도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가 남아있어 범위 및 경계가 유동적임으로써,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므로 계획관리지역의 범위 및 경계의 결정시까지 영흥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중지하고,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비토록 되어있고 변경이 가능하므로 웅진군

전반적인 용도지역 세분 결과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인천시에 변경요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 축소가 예상되므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과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해 달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옹진군에서는 2004.10.19.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 대상사업으로 영흥면 지역의 2.15km²(십리포 0.07km², 장경리 0.22km², 내리 0.52km², 진두 0.84km², 선재 0.50km²)사업량을 시 도시계획과에 요청 하였으며, 2006.6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영흥면 진두리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0.67km²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 용역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41-7, 2005.09.08)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는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 및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8-다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에도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용역진행 중 상위계획의 변동가능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행정절차 이행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옹진군에서는 용역업체의 문제점 보고시기인 2006.7.12.부터 2007.4.19. 설계변경 시행전까지 본 용역의 발주시기가 부적합하고 용역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과업지시서등을 면밀히 검토 후 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본 용역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등 본 용역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이행하지 않고 용역을 계속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설계변경 시행 부적정

용역계약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기술용역 공정계획의 변경·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데도,

웅진군에서는 용역업체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보고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안 없이 용역을 진행시키다가 준공기한 1개월을 앞둔 2007.4.19.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결정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면적을 당초 11km²에서 0.29km²로 축소하고, 본 용역의 주요과업 내용과 관계가 없고 필요하다면 별도로 발주를 하여야 할 측량면적 확대(11km²→22.25km²)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과업을 추가(53.4km)하는 것으로 용역업체의 계약금액을 보전해 주는 등 『영흥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의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시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7.10.25. 본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군수지시에 의거 회의를 개최 후 2007.12.21.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제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20.36km),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인도·자전거도로·버스승강장을 포함한 도로확폭계획 세부 도로조서를 작성(39.4km)하는 것으로 2차 설계변경을 거쳐 2008.2.12. 최종 준공 처리 하였으나,

당초 주요과업 내용인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은 제외되고 본 용역과 관계가 없는 측량면적 증가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도로세부조서 작성으로 설계변경 되어 향후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 결정고시가 되면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시 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등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각종 용역발주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적정한 시기에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2. 용역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시에는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안을 강구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3. 설계변경도 관계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2]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관광문화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세트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 세트장 건립비 및 드라마제작비 지원현황

- 2004. 10. 14 : 드라마 세트장 조성·제작지원 계획수립
- 2005. 04. 18 : 드라마 제작지원 보조금 자금교부(400,000천원)
- 2005. 05. 31 : 세트장 건립지원 보조금 자금교부(600,000천원)
- 2005. 10. 05 : 세트장 건립지원 보조금 자금교부(277,272천원)

2. 진입로 확·포장 및 시설물 보수공사 현황

- 드라마세트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현황
 - 위 치 : 북도면 △△리 1-25번지일원(54필지, 4,252m²)
 - 사 업 량 : L = 881m, B = 4.0~5.0m(기간 : 2007.12.26 ~ 2008.08.06)
 - 집행금액 : 1,218,422천원(시설비 497,680천원, 토지보상비 720,742천원)
- 드라마세트장 시설보수공사 현황
 - 공사기간 : 2007. 11. 07 ~ 2007. 12. 06
 - 계약금액 : 20,834천원(도색, 방부목설치, 천정보수, 안내표지판 설치 등)

3. ◆◆◆◆ 세트장 관리운영 현황

- 세트장 건립 및 드라마 방영 현황
 - 위 치 : 북도면 △△리 산1-11번지 외 3필지(지상2층)
 - 드라마 방영 : 2005. 01. 05 ~ 03. 17

○ ◆◆◆◆ 세트장 수입 및 지출현황

(계약기간 2006.7.1 ~ 2009.6.30)

월별	입 장 객 수			수 입 금 액(천원)			지 출 금 액(천원)			웅진군 수입금액 (천 원)
	합 계	대인	소인	합 계	입장료	대 여	합 계	인건비	관리비	
합 계	18,206	15,576	2,806	98,663	72,413	26,250	107,202	56,500	50,711	5,304
2006 (6개월)	7,370	7,123	440	30,164	23,014	7,150	23,674	13,200	10,474	2,697
2007 (12개월)	7,212	5,650	1,544	43,624	32,724	10,900	43,352	25,700	17,661	2,097
2008 (8개월)	3,624	2,803	821	24,875	16,675	8,200	40,175	17,600	22,575	510

[위법부당내용]

웅진군에서는 천혜의 자연경관 및 수도권과의 근접성을 이용하고 국내 굴지의 영상물 제작사와 협력하여 드라마 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2004.8.26. 『웅진 영상 테마파크 조성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10.14. 『드라마세트장 조성·제작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프로덕션에 2005.4.18. ◆◆◆◆ 드라마 제작비로 400,000천원 및 2005.5.31.과 2005.10.5. 세트장 건립비로 877,272천원을 각각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1,218,422천원(2008년8월 준공처리) 및 세트장 시설보수 공사비로 20,834천원(2007년12월 준공처리)을 집행하는 등 ◆◆◆◆ 세트장관련 총 2,516백만원을 지원 및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 드라마 세트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를 하고자 (주)☆☆☆☆ 대표 유 ○○과 세트장 위탁관리 협약서를 체결 후 2006.7.1.부터 현재까지 관리대행을 하고 있으나,

◆◆◆◆ 세트장 위탁관리 협약서 제6조에 의하면 세트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총수입(입장료, 촬영장 대여비,

이벤트 사업비, 상품판매비 등)에서 총지출(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재산세, 관리 소모품)을 공제한 순수익금의 50%를 임차료로 하며, 임차료는 익월 10일까지 웅진군청에 입금처리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어 관리대행 업체에서 수익금 창출을 위한 상품개발, 관광코스 개발, 마케팅 강화, 이벤트 행사기획 등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 세트장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면 위탁관리 협약체결 후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5,304천원(2006년 2,697천원, 2007년 2,097천원, 2008년 510천원)입금되었으나 2008년 2월부터는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 세트장 위탁관리 협약서 제11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3개월 이상 순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 (주)☆☆☆☆에서는 자발적으로 관광객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후 3개월 동안에도 수익금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웅진군에서는 세트장 관리대행 업체인 (주)☆☆☆☆에서 2008년2월부터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협약서 내용에 의거 자발적으로 관광객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 드라마 세트장을 소홀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드라마 방영에 따른 홍보사업은 드라마 방영이 종료되면 지속성이 적어지므로 앞으로는 홍보사업 시행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결정하시기 바라며,
2. ◆◆◆◆ 드라마 세트장운영에 대하여는 위탁관리 협약서에 의거 위탁업체로 하여금 관광객 유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3]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설재난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사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웅진군 건설재난과에서 2006.9.1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새마을 경로당 신축공사 등 3건의 전기분야에 대하여는 공업직(전기)이 아닌 시설직(건축)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12건의 기계설비분야는 공업직(기계)이 아닌 시설직(건축)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각 공사분야별로 준공검사자 지정절차 없이 준공검사를 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용역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정보통신(2건) 및 전기분야(2건)에 대하여 용역감독관 및 준공검사자 지정 없이 용역수행을 완료하였고 △△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4건의 기계설비분야에 대하여는 공업직(기계)이 아닌 시설직(건축)이 용역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각 용역분야별로 준공검사자 지정절차 없이 준공검사를 처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앞으로는 각종 용역 및 공사발주시 해당 분야별로 용역(공사)감독관을 지정·운영하여 설계단계 및 공사진행 초기부터 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실설계 및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2. 용역 및 공사의 준공서류가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분야별로 준공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검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 녹지분야

[일련번호 : 74]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어촌체험장 조성사업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영암어촌체험장 조성사업 현황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금액	도급자
07,05.21	07,05.21	‘07.07.29	211,693천원	(주)◆◆조경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입찰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이 된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함으로 입찰 공고 시 당해 공사의 내역을 면밀히 검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건설업을 결정 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진군 재무과에서는 “○○어촌체험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공사 전자입찰을 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건축공사로 판단하고 조달청에서 공포한 “2007년도 상반기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적용 기준”에 따라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 공사원가계산을 하여 해양수산과에서 발주 의뢰한 위 사업에 대하여 자체 분석결과 조경시설물 공사로 판단이 되었다면 건축공사와 조경시설물 공사의 제비율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공사원가 계산부서와 협의 하여 업종에 맞게 원가계산을 재산정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을 하였어야 함에도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 및 계약을 체결 시공함으로써 1,282천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치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5]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환경녹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 환급

[위법부당내용]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 환급 현황

89건 101,554,880원 (내역 별첨)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산지전용 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 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 된 경우 등 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 금액을 결정하고 납부한 자 등에 통지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옹진군 환경녹지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 전용기간이 만료된 허가지 등에 대하여 납입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9건 101,554,880원을 장기간 환급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 환급하시고,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6]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옹진군청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미 반환

[위법부당내용]

○ 복구비 미 반환 현황

21건 42,001천 원 (내역 별첨)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에 따라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 면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된 때, 복구준공 검사가 완료된 때 등 『같은 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예치자에게 반환하도록 정하여 있으므로 비록 예치자의 반환 청구가 없다 할지라도 반환 사유가 발생되면 반환 통보 등 적극적으로 반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옹진군 환경녹지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복구준공이 완료되었거나 산림 훼손이 없이 허가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1999년부터 현재까지 옹진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현금으로 예치된 21건 42,001,450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환노력을 하지 않고 예치자의 청구가 없다는 사유로 장기간 반환치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예치자에 반환 노력을 다하고, 부득이 환급이 불가능한 5년 이상 된 예치금에 대하여는 세입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2.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7]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용진군 기획실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행정소송 비용 회수 업무 소홀

[위법부당내용]

○ 행정소송 비용 미 회수 현황

사 건 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접수일	종결일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인천지법 2006가단 86336	나○○	용진군수	‘06.07.27	‘06.12.05	기각
채석허가 처분 취소	인천지법 2006구합 5070	강○○ (129명)	용진군수	‘06.11.23	‘07.02.05	원고의 소취하

승소사건 및 소 취하로 승소간주 종결된 사건에 지출된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주민의 실익 없는 소송제기 예방을 위하여 철저히 그 비용을 회수하여 하도록 『용진군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 예규 제154호(2007. 03. 14)가 제정되어 있고 『같은 예규』 제3조의 세부 시행요령에서는 승소사건 및 소 취하로 승소간주 되는 법원의 확정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비용 확정 결정 내역을 통보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고지하여 승소 결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 주민의 실익 없는 소송 제기를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진군청 기획실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용진군수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이 기각 또는 원고의 소 취하로 승소로 간주되는 법원의 확정 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하여 그 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패소자에게 변제를 고지하는 등의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에 게을리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회수를 위한 비용이 소송비용 확정 액 보다 더 소요 될 경우에는 공익과 실익을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8]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무과(해양수산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공사 하자검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진두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공사 현황

착수일	준공검사일	계약액	도급사	하자기간	하자만료일	하자조사일
'05.01.04	'05.06.30	천원 355,190	◆◆조경(주)	2년	'07.08.28	'06.05.24 (1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 책임)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하자 담보책임 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 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도급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를 취하고 하자 보수관리부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진군 재무과, 해양수산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어촌체험관광 마을 조성공사”에 대하여 하자책임담보 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면 연 2회 이상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책임담보기간 만료 전에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하나, '06. 05. 24 단 한차례의 하자 검사만을 실시함으로써 체험 관광마을 이용객의 안전과 경관을 위하여 설치한 디자인 웬스 130m가 도장이 심하게 벗겨져 경관을 저해함은 물론 그 내구성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하자 여부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시공시 설계도서에 의하면 웬스 재질이 알미늄이고 도장 방법은 열처리 분체 도장으로 미루어 볼 때 바닷가라는 악조건을 감안 하더라도 시공 후 3년 만에 도장이 트고 벗겨진다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하자임에도 하자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재 도장비용 6,732천원 상당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시공사와 협의 하시어 보수토록 조치하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9]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환경녹지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 백령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현황

착수일	준공일	계약금액	도급자
‘07. 12. 27	‘08. 12. 10	1,012백만원	(주) ◆◆에스코

○ 건설기술자 배치 현황

배치구분	배치기간	성명	분야	등급
현장대리인	‘07.12.27~‘08.07.09	박○○	기계	중급
“	‘08.07.10~현재	최○○	기계	초급
안전관리자	‘07.12.27~현재	김○○	기계	초급
품질관리자	‘07.12.27~현재	김○○	기계	초급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3, 2205.09.08) 및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제195호, 2005. 12. 30) 제14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절한 공사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같은 법』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의등)규정에 따라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이거나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규모에 적합한 품질관리 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등) 규정에 의거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6조의4 (건설시공자의 업무정지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임받은 시장, 구청장)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 증을 대여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의2 (벌칙) 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 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 기술 경력 증을 대여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술 용역 및 건설공사 감독은 건설현장 또는 기술용역의 참여 기술자가 시공 또는 용역의 수행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 하거나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진군 환경녹지과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도급자 : (주)◆◆에스코]를 시행하면서 현장에 배치되었다고 신고된 기술자 현장대리인 박○○의 경우 본 공사 배치기간 (2007. 12. 27~ 2008. 07. 09)에 하남시청에서 발주한 “소각시설 플랜트 정비공사”와,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내화물 공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었으며, 안전관리자 김○○의 경우 본 공사 배치 기간 (2007. 12. 27~ 현재 까지) ◆◆시청에서 발주한 “□□면 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동부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설치공사중연소가스처리설비제작및설치 공사“, “목재펠릿제조시설공사“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허위로 본 공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2008. 09. 26 감사일 현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에 적정 하도록 건설기술자의 배치·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0]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옹진군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3

[제 목] 개발행위 허가 업무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개발행위 불허(반려) 후 허가 현황

위치	지목	지적	신청 면적	목적	처분일시	신청인	구분 및 사유
영흥면 ○○리 170-123	전	4,656	988㎡	단독주택	‘05.03.31	—	불허가 경사도 30%이상
“	“	“	995	“	‘05.05.11	—	허가
“	“	“	928	“	‘05.03.31	—	불허가 진입로 미확보
북도면 ◇◇리 559-12	답	778	389㎡	근생	‘06.07.03	—	반려 농지축절단,농지잠식 우려
“	“	“	389	“	‘06.08.10	—	허가
“	“	“	389	“	‘06.07.03	—	반려 농지축절단,농지잠식 우려
“	“	“	389	“	“06.08.10	—	허가

인·허가 등의 민원은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기준)별표1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저촉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하여 공정하고 친절하게 가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용진군청 개발계획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접수 처리함에 있어 영흥면 ○○리 170-123번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와 현황도등의 미비로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한 후 보완이 모두 이루어지자 신청지는 경사가 29.62%임에도 경사도가 약30%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1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 제20조 제1항 규정을 들어 2005. 03. 31 불허하고, 2005. 04. 21 신청지의 경사도를 27.69%로 조정하여 재신청을 하자 2005. 05. 11 허가처리하고, 북도면 ○○리 559-12번지의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주변지역이 농지로서 집단화 되어 있고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며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이 우려가 된다”는 사유로 2006. 07. 03 반려 한 후 2006. 08. 10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허가 처리하는 등 일관성 없는 민원처리로 신청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행정의 신뢰를 상실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1]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행정과, 건설과, 물관리사업소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16천 원

[신분상 조치] 훈계4

[제 목] 공무 국외여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옹진군 지방공무원은 공무국외 여행을 하기 위하여 는 『옹진군 공무국외 여행규정』 제3조(공무국외 여행허가)규정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군수는 『같은 규정』 제10조(여행제한 및 억제)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 여행 계획서를 심사하여 각종건설사업, 용역, 물품구매계약 시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억제 하여야 함은 물론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옹진군군정조정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받아 허가 하여야 합니다.

1. 옹진군 자치행정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설과 와 물관리사업소에서 국외특수교량의 유지 및 계측 관리 자료 수집 목적의 공무국외여행 3건의 허가 신청은 “○○대교 및 ◇◇ 대교 위탁관리체계 (BMS) 구축용역”비에 해외자료 수집비용을 반영하여 도급사 ((주)△△코퍼레이션) 직원과 함께 하는 여행이고, 물관리사업소에서 “선진 하수도시설 벤취 마킹 ” 목적의 공무국외 허가 신청은 “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위·수탁 협약”에 따라 □□관리공단에 위탁한 “옹진군 하수도사업비”에

2위포함하여 □□관리공단 직원 1명과 함께 하는 여행이므로 『웅진군 공무국 외여행규정』 제10조 (여행제한 및 억제) 규정에 따라 불허하거나 『같은 규정』 제4조 (심사절차) 규정에 의거 웅진군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이 있고,

2. 웅진군 건설과, 물관리사업소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대교 및 ◇◇대교 위탁관리체계 (BMS) 구축용역”을 2004. 04. 09 (주) △△코퍼레이션과 5년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체결 하여 시행하면서 국외특수교량의 유지 및 계측관리 자료 수집 목적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용역비에 20,000천 원과 30,000천 원을 각각 설계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 용역사 직원 3명과 함께 부적절하게 공무국의 여행을 하였고, 또한 국내 자료 수집목적으로 10,000천 원을 설계 변경을 통해 용역비에 반영하여 용역사 직원과 함께 연륙·연도교 비교 사례 조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직원의 국내 여비는 지출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516,000원을 부서 국내여비로 지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물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공단과 2006. 12. 28 “웅진군 하수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21조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수행을 위하여 선진외국의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국내·해외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관리공단에 지급된 사업비용 642,944천원 중 6,496천원 상당을 사용하여 □□관리공단 직원 1명과 함께 부적절하게 공무국의 여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 분 요 구]

1. “○○대교 및 ◇◇대교 위탁관리체계 (BMS) 구축용역” 국내사례 조사를 위하여 지출한 516천원의 국내 여비는 사용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시고
2.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엄정히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